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2015. 7

발 간 사

정보통신공사업은 유·무선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과 고도화에 기여하는 등, ICT 네트워크 인프라의 기반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산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ICT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를 포함한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유·무선 통신시장의 정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헤치고 정보통신공사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시공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통신망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던 공사업을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역량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사업육성정책이 시장맞춤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도 내 세부 지원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보통신공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보통신공사협회 임·직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 장 임 주 환

목 차

[요약문]	ix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5
제 1 절 중소기업 지원정책	5
제 2 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현황	13
제 3 절 해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41
제 4 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향	47
제 3 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54
제 1 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현황	54
제 2 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분석	59
제 3 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현황	68
제 4 절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분석	80
제 5 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피해사례	83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91

참고문헌	97
[별첨 1] 정보통신공사업 경쟁제품 지정품목 기술개발 및 인증 현황(2014년)	99

표 목 차

<표 2-1-1> 중소기업의 범위	5
<표 2-1-2>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제도	12
<표 2-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변천과정	16
<표 2-2-2>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8
<표 2-2-3> 「판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9
<표 2-2-4>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21
<표 2-2-5>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23
<표 2-2-6> 「판로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4
<표 2-2-7> 「판로지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26
<표 2-2-8>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28
<표 2-2-9>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30
<표 2-2-10>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31
<표 2-2-1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32
<표 2-2-12>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33
<표 2-2-13> 「판로지원법」 제15조 및 제18조	35
<표 2-2-14> 「판로지원법」 제19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	37
<표 2-2-15>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목표 비율	39
<표 2-3-1> 해외의 공공구매제도 추진 목적 및 내용	46
<표 2-4-1> 최종 기준집합(Cluster) 및 세부요소(Node)	50
<표 2-4-2>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향(ANP 분석 결과)	51
<표 3-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연도별)	55

<표 3-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류	56
<표 3-1-3> 산업별(산업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2014년 기준)	57
<표 3-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현황(2014년 기준)	58
<표 3-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 기준	61
<표 3-2-2> 산업군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 평가	61
<표 3-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품군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적합도 분석 결과	62
<표 3-2-4> 형태별 산업 분류	63
<표 3-2-5>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과 국가 산업구분과의 연계	63
<표 3-2-6> 산업연관성 분석 특이사항	64
<표 3-2-7>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	65
<표 3-2-8> 산업연관성 분석 적용 산정식	66
<표 3-2-9> 파급효과 분석결과(2012년 기준)	67
<표 3-3-1>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취급 및 직접생산 업체수 현황	70
<표 3-3-2> 정보통신공사업 경쟁제품 지정품목의 공공부문 입찰 현황(2014년 기준)	73
<표 3-3-3> 중소기업 제품 우선조달 범위 내 공공기관 발주 현황(2014년 기준)	74
<표 3-3-4>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인증제도 및 개요	75
<표 3-3-5>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기준	77
<표 3-3-6>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경쟁제품 지정품목 취급업체별 기술인증 실적 (2014년 기준)	78
<표 3-3-7> 정보통신공사업 경쟁제품 지정품목 기술개발 및 인증 현황(2014년 기준)	78
<표 3-4-1> 지정 품목 제품군 및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비교	81

<표 3-4-2> 공공물량 계약 특성별 실적(실적금액 기준)	82
<표 3-4-3> 제품군별 시장집중도 분석(실적금액 기준)	82
<표 4-1-1>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분석결과 종합(순위)	93
<표 4-1-2>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적합성 분석	94

그 립 목 차

[그림 2-1-1] 소기업 분류기준 개편	6
[그림 2-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17
[그림 2-2-2] 직접생산 확인절차	21
[그림 2-2-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흐름	26
[그림 2-2-4]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	30
[그림 2-2-5] 지방중기청을 통한 우선구매제도 지원	33
[그림 2-2-6] 성능인증절차	35
[그림 2-2-7] 성능검사 및 원가계산비용 지원 절차	36
[그림 2-4-1] ANP의 일반적 상호관계	49
[그림 2-4-2]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향	52
[그림 3-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	54
[그림 3-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속성 분석	59
[그림 3-2-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대상품목 특성별 분류 기준	60
[그림 3-3-1] 중기간 경쟁제품(통합배선반) 발주 사례(○○중앙계약관, '14.5.15)	71
[그림 3-5-1] 공공기관 구매액 대비 중기간경쟁제품 구매액 비교('13년) ...	85
[그림 3-5-2] 연도별 위장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규모	86
[그림 3-5-3] 중기간 경쟁제품 발주사례 및 지정제품 관련 발주(금액) 비율 ...	89
[그림 4-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선 방향 종합	96

〈 요약문 〉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제도 검토 및 문제 제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이후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발전·운영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
- 중기간 경쟁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공공판로지원 정책 운영 과정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고려, 판로 제공의 효율성 및 현실성, 참여 기회 공정성, 기술개발 기회 등에서 문제점 발생
 - 중기간 경쟁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소수 업체의 지원 혜택 독과점 등의 문제로 제도 취지를 저해하는 사안 발생
- 또한, 국가차원에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보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기술력 보급·확대 필요 분야(ICT)에 대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특정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치부되는 사례 발생
 - 관계부처 협의 지정(제품의 생산가능 여부 및 일부 데이터에 의존한 기준 충족 여부 판단 등)으로 정량지표 등에 따른 객관성 결여
 - 지정에 따른 국가 및 해당 시장 내 파급효과(산업 및 국가경쟁력, 기술개발, 특정 업체의 독과점 등)등의 고려 미흡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품질력 저하 및 시장 참여 형평성 저하 등이 발생
 -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영위되는 산업 특성과 급변하는 ICT 기술 환경에서 특정품목(지정품목)의 기술 개발 및 기술 전문성(기술 습득, 시공 경험 등) 저하

※ 통신부문 산업의 경우, 전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변화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세, 국가적 신성장동력 분야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품목에 따른 수동적 기술개발·투자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발생(지정을 위한 평가 절차에 환경 및 국가경쟁력 측면에서의 평가 및 판단 필요)

- 정보통신공사업은(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품목)은 대부분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 물품임에도 공공물량에 있어 소수 공사업체(직접생산 업체)가 주도(납품, 시공 등)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 축소(공공 입찰, 시공, 기술개발 등)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투자 유인 상실 및 장기적인 국가적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 저하 우려

※ 예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 중 전자·정보통신 부문의 통합배선반(4322281805)의 경우, 건물의 네트워크 인프라 필수장비로써 대규모 공공물량(건물 및 네트워크 등) 발생에도 불구하고 약 8천개 공사업체 중, 단 10여개 공사업체(중소기업)만이 공공 발주의 납품·설치가 가능

II.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고려사항

○ 세계화, 개방화 추세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단일 시장 출현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은 혁신을 위한 노력과 기술에 대한 투자 등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 노력과 함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위한 환경 조성 정책 발굴·지원

○ 중소기업 정책은 국가정책의 한 분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지용희 외, 2005)

- 중소기업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자연적으로 공공성을 띄게 되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성 있는

정치력이 내포된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경영일반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 구별

- 중소기업자가 특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문제로서 인지하는 자가 정부여야 하며 정부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원인이 중소기업 자체경영의 불합리성 또는 낙후된 기술수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책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정책은 나라의 정치 및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경제력 집중에 따른 기업의 거대화, 경제의 과점화 단계에 이를 경우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함

III.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공공구매’란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
- (정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총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제도
 -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등
 - ※ 판로지원법 외 다른 법률은 대체로 중소기업지원을 제도운영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판로지원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라고 총칭

- 공공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의 절차를 적용받고 있으나 특별법에 해당하는 ‘판로지원법’을 우선 적용

※ 판로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 지정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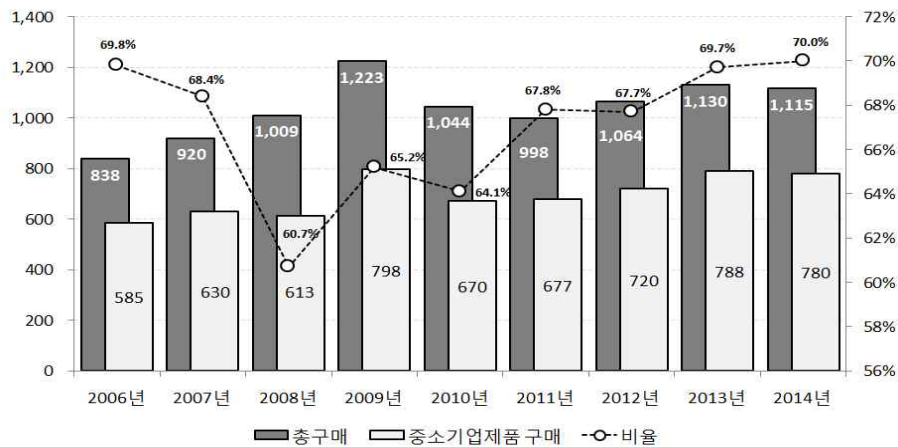
- 공공구매 규모는 약 112조('14) 규모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약 78.0조원으로 총 공공구매 규모의 70.0%에 달함

- 세부적으로 총구매의 경우, 행정기관 58.8조(52.7%, 총구매실적 대비), 공공기관 52.8조(47.3%),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행정기관 46.2조(59.2%, 중소기업제품구매 실적 대비), 공공기관 31.9조(40.8%)로 나 타남

<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

(단위: 천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구매	838	920	1,009	1,223	1,044	998	1,064	1,130	1,115
중소기업 제품 구매	585	630	613	798	670	677	720	788	780
비율	69.8%	68.4%	60.7%	65.2%	64.1%	67.8%	67.7%	69.7%	70.0%



- (‘판로지원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동법 제1조(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매확대를 비롯한 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수주확대, 만성적 중소기업 판매난 해소,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인 제공
 - 공공기관 구매력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효과 달성
 - ※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작성·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직접생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일정 납품가격(예정가격의 88%) 보장(계약이행능력 심사)을 비롯하여,

- 일정 자격요건 보유 조합의 참여 가능 및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분리 품목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보호·육성하는 사회정책적인 방향으로 추진
 - 이는 중소기업 정착 및 경영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품질 및 생산성 저하와 자생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의욕 저하에 대한 부작용 발생
 -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보다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지원에 초점
 -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에도 시장경제 원리 도입·적용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활용 필요
 - ※ 실제 공공시장에서 제도적 틀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인식 저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 실적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해외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시사점

- 해외에서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리한 조건 등을 제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제도 시행
 - 미국과 일본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공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도 운영
 - 영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장애요소 제거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경쟁을 하며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지불가치가 있는 제품 생산 유도

※ 해외 공공구매제도(우리나라 제도 명칭 기준)의 목적은 대체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기술 개발, 가격경쟁력의 제고 등을 위한 자생력을 키우고 공공시장 역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해외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불리한 조건을 보완해 줌으로써 시장으로의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데 중점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급확대는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상향 달성으로 대표

※ 정책 평가시 구매목표 설정과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에서는 품질이 미흡하거나 다소 고가이더라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

○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과 지원의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의 역할 중요

－ 세계화·개방화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 개선이 시급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분석

○ ANP(Analytic Network Process)를 활용한 정보통신부문의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시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확장한 방식으로 대행렬(Super-matrix)을 활용하여 극한 특성(Limiting Properties)을 구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 ANP 모델은 다기준 분석법(Multi Criteria Analysis)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피드백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중요도 도출을 가능하게 함

※ ANP 모델은 Thomas. L. Satty에 의해 제안된 우선순위 분석 방법론으로 정성적 지식을 활용하여 평가요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요도를 결정하는 모델

- (기준집합(Cluster) 및 세부요소(Node) 검토·도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적합성 판단(Goal)을 위해 기준집합(Cluster)의 선정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크게 공공구매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기준으로,
 - ‘중소기업 기반의 국가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중기간 경쟁제품 실효성 제고’로 구분하여 선정
- 세부요소(Node)는 Cluster 별로 기준집합으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구성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ANP 분석결과 중소기업 자생력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분석결과에 따라 제도의 개선방향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17.4%),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16.5%),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향상(14.5%), 산업발전 기여 확대(12.5%), 지정제도의 정량적 판단기준 마련(10.9%) 등의 순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방향(ANP 분석 결과) >

상위변수 (Cluster)	하위변수 (Node)	극한행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중소기업 기반의 국가경쟁력 제고 (A)	a.1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품질, 기술, 가격) 경쟁력 제고	0.145435	3
	a.2 신성장동력 분야(고부가가치 산업) 자율 경쟁 확대	0.074968	7
	a.3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0.073295	8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B)	b.1 중소기업 자생력 향상	0.173592	1
	b.2 시장접근성 해소(향상)	0.164532	2
	b.3 공경경쟁 환경 조성	0.085639	6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 실효성 제고 (C)	c.1 산업 발전 기여도 확대	0.124538	4
	c.2 지정제도의 정량적 판단기준 마련	0.108965	5
	c.3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 개선	0.049036	9

IV.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현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 (도입) 2006년 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물품을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정 제품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 ※ 2004년 12월 31일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제도를 시행(2006년 1월 1일)
- (기준 및 절차)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 직접 생산·납품 중소기업’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 10억원 이상으로 규정
 -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른 판로 축소 등 경영애로 사례 및 관련 통계 조사로 필요성 인정 시 지정
 - ※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직접 생산·납품 중소기업 기준을 5개 이상으로 적용
- 2014년 11월 기준 총 207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이며 이중 산업군(총 12개) 구분 기준에 따라 전자·정보통신부문의 지정 제품은 총 14개 제품군(76개 세부품명)으로 구성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만을 선별하면 전자·정보통신부문의 14개 제품군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은 10개 제품군, 17개 품목, 28개 세부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V.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적합성 분석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적합성(실적 분석 중심)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하여 제품 특성을 물품, 업체, 속성 등으로 정의하고,
 - 정책추진 기관 관점과 정책수요 업체 관점에서 공급금액, 지원집중도, 제품경쟁도, 업체참여도 등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분석(중소기업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조달청, 2012)
- 해당 적합성 분석에 따르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적합한 품목은 대규모 시장의 형성과 다수의 업체 참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은 시장 특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 분석 결과를 3단계(적합, 고려, 부적합)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 적합 품목은 600억 이상 시장, 100업체 이상 참여, 상위 10% 업체의 공급금액 비중(총공급금액 대비) 40% 이하 분산,
 - 고려 품목은 600억 미만 20억원 이상 시장, 100업체 이상 참여, 상위 10% 업체의 공급금액 비중 50% 이하 분산,
 - 부적합 품목은 20억 미만 시장규모, 10개 이하 업체 참여, 상위 10% 업체의 공급금액 비중 60% 이상으로 나타남
- 제품군별 적합도에 따른 산업별(산업군) 적합 분석결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 산업은 콘크리트·레미콘 등으로 나타남(3개년 평균(`10~`12))
 - 다음으로 도로수송, 선박, 전산 등이 포함된 기타부문과 금속 순이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물품 포함 산업군인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8순위로 나타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의 적합성이 낮은 산업군인 것으로 나타남

○ 추가로, 적합도 분석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평균점수는 68.0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적합하지 않은 ‘고려필요’ 또는 ‘부적합’으로 분석됨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10개 제품군의 3개년 분석 결과, 적합 4개, 고려 12개, 부적합 5개, 분석제외 8로 나타남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제품군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적합도 분석 결과 >

제품군	2010년			2011년			2012년		
	순위	점수	판단	순위	점수	판단	순위	점수	판단
구내방송장치	82	72	고려	103	69	고려	60	75	고려
다중화장치	121	63	부적	16	81	적합	37	78	적합
데이터포트장치	188	-	-	188	-	-	183	-	-
무선통신장치	110	67	고려	106	69	고려	74	73	고려
열차행선안내장치	187	-	-	187	-	-	156	35	부적
유무선원격제어장치	153	47	부적	142	56	부적	155	35	부적
전광판	49	76	적합	54	76	고려	69	74	고려
전화교환기네트워크 연결장치	62	75	고려	68	75	고려	82	72	고려
출입통제시스템	-	-	-	-	-	-	-	-	-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	39	77	적합	59	75	고려	39	77	적합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한계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절차상 지정 추천과 협의의 통한 공고로 해당 제도 내 지정 품목으로 편입

- 지정품목의 중소기업 시장 포함, 산업과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파급 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배제하고,

- 해당 품목의 사업영위 분야(중소기업 시장)에서 직접생산(제조시설 보유) 등에 따른 보호 유무 판단에 의한 지정
- 대규모 공공시장에서의 제조·납품을 비롯한 시공·설치 부문까지 타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쟁(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간) 축소에 따른 기술개발 및 투자 수요 축소
- 이는 더 나아가 기술개발 축소·낙후를 비롯하여 사회 경제의 글로벌 추세에서 해당 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 저하 현상 발생 가능
- ※ 앞선 해외사례에서 검토하였듯이 해외의 공공구매제도 및 하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의 불리한 조건을 보완해 줌으로써 시장으로의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 인도의 경우,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소기업 보호제도’를 1967년 도입하였으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기업 업종에 허용된 기준을 따르려면 사업을 확장할 수 없어 기술개선 및 생산 등에 대한 투자 감소와 고용 성장 정체, 수출 실적 감소 등 중소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는 판단으로 제도 폐지 예정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적합성 (정책 및 시장 관점)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공공발주 물량에 있어 특정 사업자(중소기업)의 성과 창출에 활용됨으로써 시장 자율경쟁 저하에 따른 해당 품목의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의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품목의 경우 대부분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로, 이는 방송통신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국가 통계 산업군에 방송통신 서비스 부문을 고려 대상에 포함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평가 항목에 거시적 판단기준 마련을 가정으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자율경쟁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경쟁,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 내 지정품목 축소 필요
- 앞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가차원의 거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산업군)연관분석(Industry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

○ (산업별 기여도 분석)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경제 기여도 분석결과, 금속과 기계부문 산업군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뒤를 이어 화학, 전기, 섬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7순위로 분석됨

< 산업별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결과 >

구분	기여도				경제성장률 기여도	순위
	2010	2011	2012	평균		
가구	1.13	-0.37	1.03	0.60	0.06%	10
금속	2.67	1.37	-0.50	1.18	1.10%	1
기계	2.65	1.17	0.25	1.36	1.07%	2
목재·종이	0.78	2.65	-0.14	1.10	0.18%	9
섬유	3.63	1.04	-0.14	1.51	0.45%	5
식품	1.03	0.11	0.60	0.58	0.38%	6
인쇄·광고물	-0.19	-1.00	0.32	-0.29	-0.02%	11
전기	1.45	1.05	1.58	1.36	0.53%	4
전자·정보통신	-0.09	0.73	0.91	0.52	0.28%	7
콘크리트·레미콘	0.01	2.55	2.08	1.55	0.19%	8
화학	2.25	-0.43	0.77	0.87	0.90%	3

○ (파급효과 분석)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발전 파급효과 분석결과, 전자·정보통신(평균 순위) 산업군의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군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인원 등으로 분석한 국가발전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 도출로부터 산정한 산업군별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전자·정보통신 산업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조와 부합하는 산업으로 간주

-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기계 산업군으로 나타남

< 파급효과 분석 결과('12년 기준) >

(단위: 십억원, 천명)

구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부가가치율	순위	고용유발 효과	순위
가구	52,043	9,382	18.03%	5	149	9
금속	514,885	77,373	15.03%	9	672	2
기계	421,351	75,199	17.85%	6	771	1
목재·종이	80,284	14,056	17.51%	7	150	8
섬유	167,352	24,445	14.61%	10	345	6
식품	315,109	61,879	19.64%	3	659	3
인쇄·광고물	22,350	5,475	24.50%	2	90	11
전기	207,547	32,246	15.54%	8	313	7
전자·정보통신	227,752	56,545	24.83%	1	584	4
콘크리트·레미콘	61,553	11,699	19.01%	4	120	10
화학	624,662	59,942	9.60%	11	453	5

VI.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현황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기간 경쟁제품 업체수 및 직접생산

- 급변하는 ICT 환경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발달로 정보통신장비의 개발·출현 확대 및 수요 증가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포함 제품의 경우, 새로운 환경의 수용 및 조성을 위한 장비·시공분야임에도 불구하고,
 - 직접생산(공공물량 부문) 제약조건으로 인해 취급업체수가 대부분 품목에서 전체 공사업체 대비 낮게 나타남
- ※ 「판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을 해당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으로 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기간 경쟁제품 취급 및 직접생산 업체수 현황 및 비율 >

번호	세부품명	현황			전체 공사업체 대비	
		취급업체	직접 생산업체	직접 생산비율	취급업체	직접 생산업체
1	구내방송장치	892	456	51.1%	11.2%	5.7%
2	광다중화장치	78	28	35.9%	1.0%	0.4%
3	다중통신장비	69	15	21.7%	0.9%	0.2%
4	시분할다중화장치	32	15	46.9%	0.4%	0.2%
5	데이터포트장치	48	11	22.9%	0.6%	0.1%
6	디지털서비스유닛	42	10	23.8%	0.5%	0.1%
7	채널서비스유닛	41	10	24.4%	0.5%	0.1%
8	무선통신송신기	196	37	18.9%	2.5%	0.5%
9	무선통신장치	271	54	19.9%	3.4%	0.7%
10	암호송신기	150	-	-	1.9%	-
11	무선송수신기	80	31	38.8%	1.0%	0.4%
12	양방향라디오	53	29	54.7%	0.7%	0.4%
13	열차행선안내장치	84	44	52.4%	1.1%	0.6%
14	원격접속장치	172	49	28.5%	2.2%	0.6%
15	교통정보전광판	558	179	32.1%	7.0%	2.3%
16	기상전광판	78	25	32.1%	1.0%	0.3%
17	안내전광판	607	194	32.0%	7.6%	2.4%
18	동보장치	147	27	18.4%	1.8%	0.3%
19	자동안내장치	63	17	27.0%	0.8%	0.2%
20	구내단자함	86	23	26.7%	1.1%	0.3%
21	국선단자함	85	22	25.9%	1.1%	0.3%
22	본배선반	81	21	25.9%	1.0%	0.3%
23	중간배선반	81	21	25.9%	1.0%	0.3%
24	통합배선반	128	22	17.2%	1.6%	0.3%
25	출입통제시스템	226	131	58.0%	2.8%	1.6%
26	영상감시장치	1,591	837	52.6%	20.0%	10.5%
27	보안용카메라	1,541	590	38.3%	19.4%	7.4%
28	차량번호판독기	233	83	35.6%	2.9%	1.0%

- 정보통신 산업 및 공사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물품은 용도 구현 상, 일부 구성품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경쟁제품으로 발주함으로써 대다수 공사업체의 참여기회 축소
- 발주기관(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제품이 포함된 납품·공사물량을 다른 장비 등을 묶어 경쟁제품으로 발주함으로써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입찰자격 축소

※ 사례: 경쟁제품 지정 품목인 통합배선반(주배선반, 중간배선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장비(스위치, 허브, 단말기) 및 광케이블까지 포함해 1건으로 발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통합배선반 직접생산자('15년 5월 기준, 22업체)로 한정함으로써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함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물량 입찰은 대부분 품목에서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1%미만 공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직접생산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 2014년 기준, 중기간 경쟁제품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경쟁제품 입찰건수(전체 1524건)는 구내방송장치(44.9%), 동보장치(14.8%), 안내전광판(8.1%), 통합배선반(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정보통신부문 경쟁제품의 28개 세부품목 중 '14년도 입찰건수 미발생 품목은 7개로 25%에 해당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지정품목 발주 현황 중 1억원 미만 실적은 약 91.1%로 소규모 발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 우선조달에 따른 중소기업 우선구매 적용금액(2.1억)기준 실적은 91.9%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정품목 경쟁은 중소 공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을 통한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우선조달 물품·용역금액을 기존 2.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변경('15.1~'16.말까지 적용)하고 낙찰자 선정방식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만 최저가 낙찰제 적용)로 개선

- 경쟁제품 지정품목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해당 품목 입찰은 대부분 중소 공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일부 공사업체(직접생산업체)만이 입찰 참여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품목 입찰은 직접생산업체 참여가능 제약조건에 따라 전체 공사업체 대비 전체 취급업체 기준 3.5%, 직접생산업체(7,948개, '13년 기준) 기준 1.4%의 공사업체만이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가능

- '14년 기준 공공기관 발주 물량 대부분이 중소기업 우선조달 적용 입찰건(91.9%)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사업체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여 일부 공사업체에 편중됨으로써 자율 시장 경쟁 저하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기간 경쟁제품 기술 개발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은 신기술 및 신제품 창출보다는 발주처(공공기관)의 발주 물량에 대한 입찰 경쟁력(가산점, 우선구매 등) 제고를 위한 관련 인증에 집중
 - 성능 및 품질, 진보성 등을 창출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등에 대한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전력신기술 인증은 매우 저조한 상황
 - 반면 성능인증, GS인증, 특허, GD인증, 실용신안등록, 의장(디자인)등록 등 공공물량 수주 확대 및 각종 권리 행사를 위한 인증 취득에 집중되는 실정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중기간 경쟁제품 취급업체 중 중소·소상공인 업체비율은 평균 73.6%이며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NET, NEP, 전력신기술 개발은 세부품명별 평균 0.64건에 불과
 -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 규모별로 신기술개발 > 입찰경쟁력 제고 > 권리확대 순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업체 규모별로 경영환경 및 수익성 등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
 - 즉 신기술 개발은 중기업 중심, 소기업의 경우에는 공공발주 입찰 참여 및 수주 확대를 위한 성능 인증 및 GS 인증 등에 집중하는 양상이며, 소기업은 권리 확대를 위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등에 집중

< 업체 규모별 신기술 개발 관련 실적('14년 기준) >

구분	업체수 (품명별 전체)	신기술개발	입찰경쟁력제고	권리확대
중기업	550	8(1.5%)	88(16.0%)	398(72.4%)
소기업	1982	9(0.5%)	273(13.8%)	1457(73.5%)
소상공인	3232	1(0.0%)	184(5.7%)	1771(54.8%)

- 정보통신 분야는 시장특성 및 거시적 환경변화·추세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부합하는 시장경쟁력 보유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정립 요구
 - 현재의 공공구매 제도 하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공공물량 입찰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보유가 필수적이나,
 -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 특성상 생산시설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음
-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국가적 산업 발전 및 기술 경쟁력 보유를 위한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시장정책이 필요한 시점
 - 즉,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경쟁제품 지정품목 직접생산업체는 설치를 위한 인력확충보다는 물품 판매,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업 경영성과 제고에 집중하고,
 - 시공부문은 비생산업체가 집중함으로써 직접생산업체의 해당 인력보유 부담 감소
 - 또한, 다양한 업체의 공공물량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생산 및 기술개발 기업의 직접적 인센티브(입찰 등)가 아닌 해당 기술 적용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 해당기술 물품을 취급하는 납품 및 설치공사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업체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취급을 통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정보통신공사 부문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 적합성 분석

- (공종별 시장집중도 분석) 정보통신공사업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인 총 10개 제품군에 대한 적합성 분석(2013년 기준)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공사실적, 발주기관별 의존도(공공, 민간 구분), 공사 규모를 통한 시장집중도 분석
 - 즉, 공사실적 및 공공기관의 의존도, 공사 규모가 클수록 지정품목에 대한 독과점의 우려가 크고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집중도 분석을 통해 적합성 여부 판단
- (분석결과) 공사실적은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물량 의존도와 평균공사규모는 열차행선안내장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품군별 시장집중도 분석(실적금액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공사실적			공공물량 의존도			평균공사규모 (백만원)	
	실적	구성비	순위	실적	의존도	순위	규모	순위
구내방송장치	2,318	1.79%	2	574	24.8%	6	15.32	8
다중화장치	54	0.04%	8	16	29.4%	5	91.97	2
무선통신장치	296	0.23%	6	55	18.5%	8	31.20	6
열차행선 안내장치	13	0.01%	9	13	100.0 %	1	98.15	1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1,218	0.94%	3	699	57.4%	3	55.85	4
전광판	538	0.41%	4	201	37.4%	4	67.05	3
전화교환기네트 워크연결장 치	95	0.07%	7	3	3.3%	9	43.80	5
출입통제시스템	458	0.35%	5	76	16.6%	7	12.80	9
폐쇄회로텔레 비전시스템	8,710	6.72%	1	5,014	57.6%	2	21.73	7

Ⅶ. 결론 및 시사점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

- (성장 중심 정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글로벌 단일 시장 출현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
 - 중소기업 연관 정책은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시장 불일치(특정 중소기업의 거대화, 과점화 등)를 차단하고,
 - 공정·자율경쟁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능동적인 시장 환경 마련과 장애요소 제거를 통한 기업간 동등 경쟁 환경 조성에 집중

□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향

- (제도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등 공공기관의 소요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구입 등을 유도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 정책 방향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존도를 높여 품질 및 생산성 저하, 자생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의욕 저하 야기
 - 즉, 현재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지원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 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글로벌 환경 부합) 해외의 공공구매제도 목적을 적극 검토·활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자생과 중소기업 기반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
 - 해외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 장벽 해소와 중소기업의 품질, 서

비스, 기술개발, 가격경쟁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구매제도 운영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정비) 중소기업의 입찰·납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및 국가적 파급효과 분석 등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필요
- 지정 품목에 대한 특정 소수 중소기업에 국한된 보호정책으로 치부됨으로써 대다수 중소기업의 공공물량 참여기회 축소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적합성 분석 및 시사점

- 콘크리트·레미콘 산업군이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73.2)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산업군이 적합도가 가장 낮게(42.0) 나타남
- 제품 속성 및 특성 분류에 따른 적합성 분석결과, 산업군별 평균 점수는 지정 적합기준 점수(75.0)에 밑도는 수준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산업군별 적합 품목 및 부적합 세부품목이 상존하는 것을 의미
- ※ 즉,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군별 부적합 지정품목의 지정 철회 및 적합여부 재검토 등을 통한 정비 필요
- 추가적으로 현행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정량적 분석을 배제한 절차상 지정 추천과 협의를 주로 하여 제도 내 지정 품목으로 편입됨에 따라,
- 지정물품 생산 중소기업을 제외한 타 중소기업의 공공물량 시장 접근의 축소로 참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및 투자 등 유인 저하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산업군별 국가 경제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국가경제 기여도는 금속, 파급효과는 전자·정보통신, 고용유발효과는 기계 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자·정보통신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인쇄·광고물과 함께 약 25%에 달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으로 분석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분석결과 종합(순위) >

번호	구분	적합성 분석	국가경제 기여도	파급효과분석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부가가치율)	고용유발효과
1	가구	3(9)	10	5	9
2	금속	2(10)	1	9	2
3	기계	5(7)	2	6	1
4	목재·종이	9(3)	9	7	8
5	섬유	10(2)	5	10	6
6	식품	11(1)	6	3	3
7	인쇄·광고물	8(4)	11	2	11
8	전기	6(6)	4	8	7
9	전자·정보통신	7(5)	7	1	4
10	콘크리트·레이콘	1(11)	8	4	10
11	화학	4(8)	3	11	5

□ 종합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의 취지로 마련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다양한 세부 지원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공공시장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세부 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로 산업별 다양한 품목을 지정('14년 기준, 207개 제품군 지정)함으로써 해당 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장
- 하지만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 시장 및 국가 경제의 파급 및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지정절차로 특정 중소기업의 보호정책으로 작용
 - 즉,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한 정량적인 평가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향상, 산업발전 기여 확대, 지정제도의 정량적 판단기준 마련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ANP 분석)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 및 국가차원의 영향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 품목 도출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합성 분석결과, 산업군별로 적합, 부적합 품목이 공존하고 있으며 식품, 기계, 전자·정보통신 산업군이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부적합한 산업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공종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종별로 전광판,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공종이 경쟁제품 지정에 부적합한 공종으로 나타났으며,

< 연관 환경을 고려한 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적합성 분석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분석 결과		
구분	총점	순위	구분	총점	순위
가구	33	10	구내방송장치	22	6
금속	22	4	다중화장치	17	4
기계	16	2	무선통신장치	25	7
목재·종이	27	7	열차행선안내장치	19	5
섬유	23	5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13	2
식품	13	1	전광판	12	1
인쇄·광고물	28	9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30	9
전기	25	6	출입통제시스템	28	8
전자·정보통신	17	3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14	3
콘크리트·레미콘	33	10			
화학	27	7			

- 입찰금액 기준 상위 10%(3개)품목의 우선조달제도 적용 수주규모(423.2억원)가 전체 실적의 65.15%를 차지하고 있어 독과점 현상 심화

- 공공입찰(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전체 1524건)이 활발한 구내방송장치(44.9%), 동보장치(14.8%), 안내전광판(8.1%), 통합배선반(6.7%)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품 지정을 개선(철회)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 및 공사 입찰 참여기회 확대 필요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총 28개 중, 2014년도 공공기관 구매수요 실적이 10억원 미만인 품목이 15개 품목으로 나타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기준 요건에 미달
 - 구매수요 실적 10억원 이상인 지정품목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용 입찰건임에도 직접생산업체 참여 조건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업체의 1.39%만이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 입찰에 참여가 가능
 - 우선조달제도를 통한 중견·대기업의 참여 차단과 직접생산업체 기준에 따른 입찰 참여 조건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일부 특정업체의 공공물량 수주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로 작용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이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각종 투자로부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중요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제도가 특정 기업의 보호장치로 치부되지 않는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환경조성
- 이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서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제한 기준인 직접생산업체 기준 등과 같은 제약조건 등은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 있음
- 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국가의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환경 조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선 방향 종합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사회가 세계화, 개방화 추세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단일 시장이 출현함에 따라 각국의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발품을 위한 투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국의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우위를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이후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로 발전·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적 성과 달성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공공판로지원 정책 운영 과정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고려, 판로 제공의 효율성 및 현실성, 참여기회 공정성, 기술개발 기회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소수 업체의 지원 혜택 및 독과점 등의 문제로 제도 취지를 저해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보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기술력 보급·확대 필요 분야(ICT)에 대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특정 중소기업의 보호제도로 치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가능 여부 및 일부 데이터에 의존한 관계부처 협의 지정에 따라 정량지표에 근거한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객관적인 평가 부족과 지정으로 국가 및 해당 시장 내 파급효과(산업 및 국가 경쟁력, 기술개발, 특정 업체의 독과점 등)등의 고려 미흡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품질 및 시장 참여 형평성 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 중 전자·정보통신 부문의 정보통신공사사업 관련 지정제품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이 영위되는 산업의 특성과 급변하는 ICT 기술 환경에서 특정품목(지정품목)의 지정으로 인한 기술개발 및 기술 전문성(기술 습득, 시공경험 등) 확보 정책은 인프라 부문에서 국가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ICT 융합환경과 인터넷신산업의 출현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자국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핵심 분야로써 글로벌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사업은 이러한 정보통신부문의 핵심인 인프라 기반의 물리적인 구축을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국가의 주요 핵심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정부차원의 부가가치 창출 주도산업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수출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의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증손회사 지분요건 완화(100%→50%)는 대기업을 기업확장을 손쉽게 해줌으로써 기술력을 보유한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손쉬운 기업사냥감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사후적인 중소기업 정책 방향의 선회는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성과 목표 달성의 실패에 기인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 마련은 중소기업 사업 환경을 더욱 수동적이고 폐쇄적으로 만들 개연성이 크며, 이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운

영·추진에서 실효성 미흡으로 인한 중소기업 정체에 따라 발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 운영 정책·제도 중,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와 중소기업 사업 영역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및 중소기업경쟁제품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반적인 시장 환경과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제도적 취지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ANP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전문 식견을 정량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지정 적합성을 시장 및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 내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고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지정제품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제도 내 편입되어 있는 지정제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2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현황

제3절 해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제4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향

제 2 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제 1 절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이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은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질적 지표로는 독립성, 시장지배력,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 경영자가 경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 양적 지표는 종업원수, 자본금액, 매출, 자산 등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분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에 대한 구분 기준도 마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는 <표 2-1-1>와 같다.

<표 2-1-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소기업	
업종	규모 기준	업종	규모 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1,5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	1,0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8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8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	4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출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 2015.5.28.)

[그림 2-1-1] 소기업 분류기준 개편

구 분	현 행 (~'15)	개 편 ('16~)
적용지표	상시근로자수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분류	18개 업종 (모든 업종 대분류)	41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그 룹	2그룹 (50-10명)	5그룹 (120-80-50-30-10억원)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4년을 기준으로 99%, 근로자는 전체 기업 중 88%를 차지하고 있어 수치적으로도 중소

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개방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확보 기반이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대에 있으며, 이로부터 국민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종합적인 관점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각종 규제와 혜택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 심화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혁신적이고 건전한 경제 주체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과 기술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의 전략적인 경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하여 공식화한 것으로 국가정책의 한 분야로써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지용희 외, 2005).

①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정됨에 따라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국가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성 및 정치성 등을 내포함으로써 사기업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 구별된다. ② 중소기업 시장과 관련한 현안의 발생 및 정책적 문제제기의 인지는 정부여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관련 문제의 분석을 통해 경제·사회적인 약점을 인지하고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중소기업 자체의 경영불합리성 또는 낙후된 기술수준에서 야기된 문제라고 인식될 경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원인이 독점자본에 의한 중소기업의 가혹한 지배에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이를 탈피할 수 있는 시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소기업 정책은 나라의 정치 및 경제의 발전 정도

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경제발전은 국민경제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에 따른 기업의 거대화, 경제의 과점화 단계에 이르면 국민경제 전체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책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모순, 대립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정책의 결정과정 및 실시과정에 있어서 정부 및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관련위원회, 정당, 압력단체 등의 참여를 거쳐 결정, 집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연관 정책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협동조합법」, 「단체수익계약제도」에 이어 「중소기업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적 체제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무렵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화 중심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중소기업 중점육성기인 1980년대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단이 부각되었으며 대기업만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전문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기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기술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정책이 본격화 되었다.

1990년대는 고도성장 한계와 경제개방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이 전환되었으며 WTO출범(1995년)으로 산업 각 부분에서 자율과 개방, 경쟁중심의 정책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후 중소기업 성장 주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설립(1996년)되었으며 주요 성장 주도 산업으로 전기, 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부품과 소재산업분야의 전문 중소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세계 시장이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이러한 역할을 위해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 창업촉진 등 성장환경 조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기조로 활용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서민경제안정, 창업환경 개선, 기업가 정신 확산, 녹색성장 등 신성장산업과 지식서비스업 육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과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슈가 확대됨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도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조세지원, 금융지원, 기술개발(R&D) 지원, 판로·수출 지원, 창업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인력지원 등의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지원 방법은 크게 직접세부문 지원과 간접세부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세부문 지원은 다시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제도는 조세감면 효과가 영구적이며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이 해당되는 반면, 간접지원제도는 조세감면 효과가 일시적이며 준비금¹⁾, 특별상각²⁾,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등이 해당된다.

-
- 1)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시켜주거나 세부담을 분할할 수 있도록 지원
 - 2) 상각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추가상각을 용인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금융지원은 크게 신용보증제도, 신용보험제도, 정책자금, 한국은행지원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은행의 설립(1961년) 및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에서 시작되어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부품공급 및 생산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요구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1999년 9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신용보증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을 지원한다. 2005년 12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 업무특화·전문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용보험은 기업 간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판매기업(채권자)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채무자)에 신용으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997년, IMF 위기 당시 어음보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4년 3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하였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공단이 추천하면 은행이 대출해 주는 대리대출 방식과 공단 직접대출 방식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는 해당부처의 산업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한 시설·운영 자금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며 광역지

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은행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대를 유도할 목적으로 1965년 도입한 제도로써 각 금융기관이 원화자금 대출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는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비율 미달은행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준수은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은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른 저리자금의 차등 배정 등을 통해 1994년부터 운용해 오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기술개발(R&D) 지원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본제품의 고도화에 한정하며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구성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수행방식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은 크게 국내 판로지원과 수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국내 판로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정책과 정부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경쟁적 시장원리의 적용을 위해 민간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지원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소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사 및 용역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가능한 한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유도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약 10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규모를 활용하여 전체 중소기업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자금·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량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공

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정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납품과 동시에 현금수금이 가능하고 기업의 인지도가 상승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제도

구분	내용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수출규모와 역량에 따라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500만불 이상 기업 중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진단, R&D, 해외마케팅, 수출 금융 등을 지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지원
무역촉진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기회 제공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세계 160개 인증획득 비용의 40~60%를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 해외 현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를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 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현지진출 지원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글로벌 기업 벤더참여(납품공급) 컨설팅 지원

※ 출처: 중소기업 지원(국회도서관, 2012)

그 밖에도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기업 보증, 엔젤투자, 창업

기업 전용 R&D,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창업과 관련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입점제한,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및 조세특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학습,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해외인력 도입 지원,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를 통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마련·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 9. 29)’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확보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해당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철수 및 축소, 확장 및 진입 자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제 2 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현황

본 절에서는 연구 목적인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정립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중소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공공구매’란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공

1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총칭한다.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과의 관계에 있어 우선 적용되는 법률³⁾로 공공조달에 있어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의 절차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판로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 지정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은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지원 정책은 1963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부구매제도가 신설되면서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있어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5년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시행으로 본격적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도입되었다.

1966년 12월 6일에는 공공구매에 있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단체계약체결, 입찰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제정으로 별도의 법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중부 등

3) 「국가계약법」 제3조(영 제3조)와 「지방계약법」 제4조(영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제도의 활용·운영을 통한 정착으로 단체수의계약 실적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중소기업 발전·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취급되었으며 그 중요성에 따라 UR정부조달협정(1997년 1월)에서도 우리나라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적용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오래도록 중소기업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어 온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카르텔로 단정됨으로써 당시 258개의 대상물품을 2001년까지 강제적으로 20%씩 축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를 위한 절차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2003년,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 폐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6년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를 미리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를 우선시행하고, 2006년 1월부터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의무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규모별 경쟁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2007년 1월부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공공구매정보망도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표 2-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변천과정

연도	내용
1963년 7월 31일	o 공공구매지원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1965년 7월 19일	o 단체수의계약제도 시행
2005년 7월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o 성능인증제도
2006년 1월	o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o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o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o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o 규모별 경쟁제도
2006년 12월	o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2007년 1월	o 직접생산확인제도 o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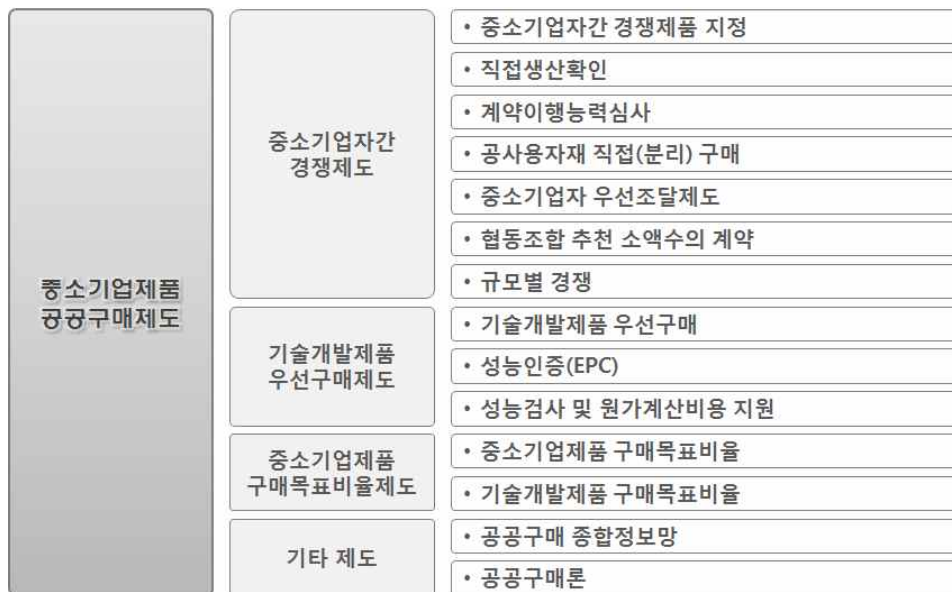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주요 내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판로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기타 특별법인)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한다.

제도는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④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사에서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납품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 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낙찰하한률(88%이상) 보장, 적정 납품능력 보유기업 선별 등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⑦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모별 경쟁제도, ⑧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협동조합을 확인해 주는 적격조합확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⑨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성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적용대상 기관은 「판로지원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⁴⁾과 이들 기관의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정은 위의 공공기관 이외에도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직·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림 2-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처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작성·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1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매확대를 비롯한 판로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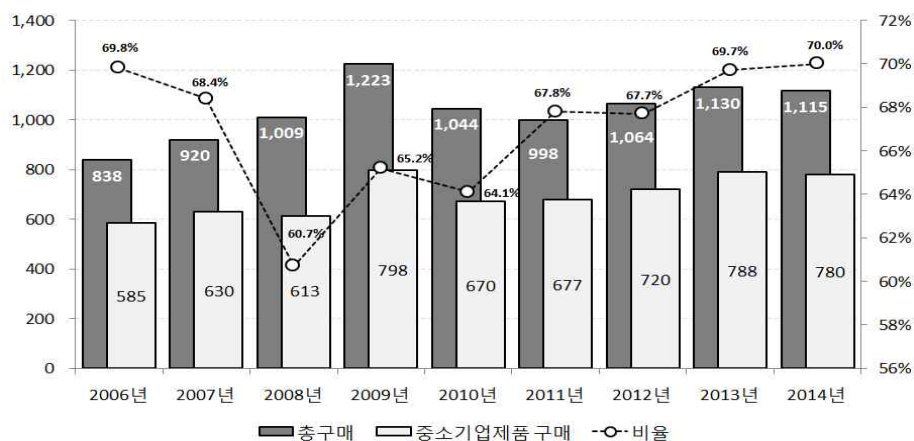
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수주확대, 만성적 판매난 해소, 기술개발 유인 등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직접생산 능력 보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계약 참여로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여 중소기업에게 일정 납품가격(예정가격의 88%) 보장을 비롯하여 일정 자격요건 보유 조합의 참여 가능,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가능,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분리 품목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 및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2-2-2>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천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구매	838	920	1,009	1,223	1,044	998	1,064	1,130	1,115
중소기업 제품 구매	585	630	613	798	670	677	720	788	780
비율	69.8%	68.4%	60.7%	65.2%	64.1%	67.8%	67.7%	69.7%	70.0%



우리나라의 공공구매는 약 112조('14) 규모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약 78.0조원으로 총 공공구매 규모의 70.0%에 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총구

매의 경우, 행정기관 58.8조(52.7%, 총구매실적 대비), 공공기관 52.8조(47.3%),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행정기관 46.2조(59.2%, 중소기업제품구매 실적 대비), 공공기관 31.9조(40.8%)로 나타나고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판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물품을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제품은 지정효력⁵⁾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요건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지정하고 있다.

<표 2-2-3> 「판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조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 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5)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행 지정된 제품(207개)은 2015년 12월 만료 예정

2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

-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직접생산확인제도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제품 구매 계약상대자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자로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1년간 재신청불가 등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을 해당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정 제품의 입찰참여에 대하여 확인된 직접생산 중소기업 및 자격요건 보유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림 2-2-2] 직접생산 확인절차



※ 자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표 2-2-4>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9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

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

-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3)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관로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한정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로써 중소기업자간 과다 수주경쟁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부작용 및 일정 가격 보전(최저 낙찰제 배제, 낙찰 하한율 88%)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적용되며 입찰 품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을 평가한다.

<표 2-2-5>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10억원 미만의 경우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10억원 이상의 경우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 등급 30점)으로 평가
공통 사항	■ 신인도 3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2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표 2-2-6> 「판로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7조
<p>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p> <p>④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p> <p>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7조
<p>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p>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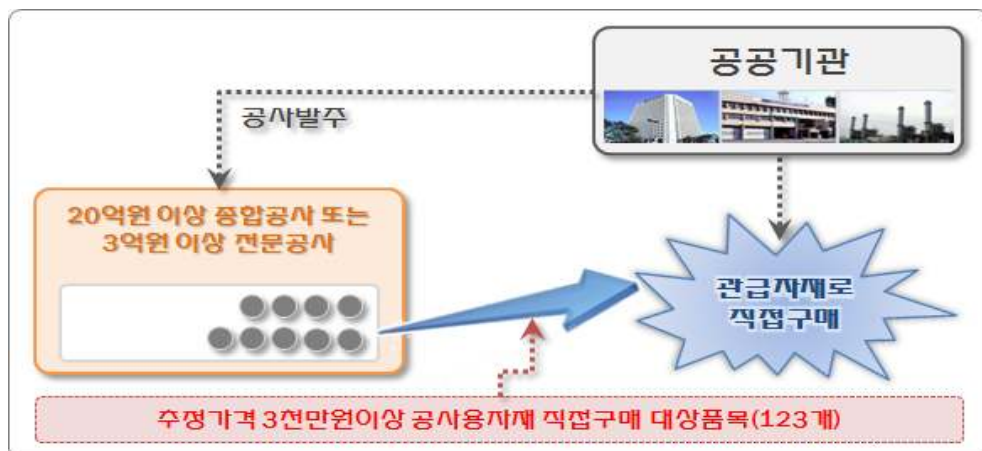
「판로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공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 공사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123개의 공사용자재가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14.11)되어 있으

2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공사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공사 예정가격의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은 직접구매,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하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 합리적 에너지 이용,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보전, 중소기업청장과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통한 지정 품목 등은 그 기준을 1천만원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림 2-2-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흐름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2012) 재구성

<표 2-2-7> 「판로지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

-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간 제한경쟁과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인 이상 제조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

2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소기업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일 경우 소기업간 제한경쟁, 추정가격 1억원~2.1억원일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2-2-8>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제2조의2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의 3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수의계약⁶⁾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제고하는 제도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내의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3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그림 2-2-4]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



※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표 2-2-9>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
<p>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p>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p> <p>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7) 규모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나친 낙찰경쟁이나 소수기업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여 영세기업에 대해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 공급과잉 등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하여 경쟁제품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관련 중소기업의 수가 적거나 과잉경쟁 우려가 낮은 점 등에 따라 무의미한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입찰의 참여 범위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3단계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단계별 참여 최저한 범위를 설정하여 하위등급 중소기업의 입찰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표 2-2-10> 중소기업의 규모별 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조합명	업종	참여 제한범위 (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용가구 (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한국전시문화산업공업협동조합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 출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7) 하위등급 기업은 상위등급 규모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규모의 입찰참여에 제한을 둠

<표 2-2-1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9조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으로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신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최저한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⁸⁾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지방중기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 우선구매 조치 결과를 지방중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다.

[그림 2-2-5] 지방중기청을 통한 우선구매제도 지원



※ 자료 : 경기지방중소기업청(2014)

<표 2-2-12> 「관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

- 8)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3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판로지원법」 제15조,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품질과 생산(납품)이행능력을 지방청이 증명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능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의 확대를 도모하며 성능인증 대상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⁹⁾으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림 2-2-6] 성능인증절차



※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표 2-2-13> 「관로지원법」 제15조 및 제18조

제15조
<p>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⑦ 중소기업청장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제18조
<p>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p>

9)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3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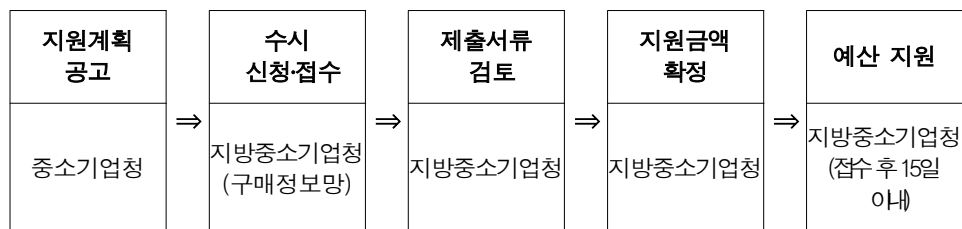
다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연구원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9조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0) 성능검사 및 원가계산비용 지원

「관로지원법」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및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가계산 비용의 50%(5백만원 이하)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2회까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EPC) 획득을 위해 성능검사에 소요된 비용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2-2-7] 성능검사 및 원가계산비용 지원 절차



※ 출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표 2-2-14> 「판로지원법」 제19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9조

-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

3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할 수 있다.

-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7조

-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및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 달성을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특정기업으로의 집중현상을 사전에 방지,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연간 제품(물품, 공사, 용역)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제품 구

매목표 비율의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수주비율이 20% 미만인 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2-2-15>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목표 비율

구 분	구매목표 비율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총 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권고
여성기업(물품) 구매율	총 물품 구매액의 5% 이상	
여성기업(공사) 구매율	총 공사 구매액의 3% 이상	
여성기업(용역) 구매율	총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장애인기업 구매율	중기청에서 총 구매액의 0.45% 권장	법적 근거 없음

※ 출처: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3)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검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소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사 및 용역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가능한 한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유도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약 78조원('14년)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규모를 활용하여 전체 중소기업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자금·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량 중소기

업의 초기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공공구매제도로부터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납품과 동시에 현금수금이 가능하고 기업의 인지도가 상승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와는 달리 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사회정책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정착 및 경영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품질 및 생산성 저하와 자생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의욕 저하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보다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자체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에도 시장경제 원리 도입·적용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공공시장에서 제도적 틀로 인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인식 저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 실적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절 해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¹⁰⁾

1. 미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미국의회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에서 공정한 비율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주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정비율 확보가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쟁 입찰에 의한 구매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연방정부)의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 여타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다른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구매 권한을 가진 모든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부서를 설치하도록 중소기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부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와 관련된 기능 및 의무를 시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연방정부 중소기업청에 ‘정부계약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전체의 지방조직과는 별도의 독자적 지방조직으로 미국 전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담당관, 그 밑에 조달지원관(PCR: Procurement Center Representatives) 및 하도급 지원관(CMR: Commercial Market Representatives)을 두고 있다.

구매목표미국의회는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서 공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총괄 목표비율(23%)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청은 동 비율달성을 위해 각 기관별 목표비율을 설정·운영¹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연방정부 기관의 목표달성 여부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시행하고 있다(양훈화, 2005).

10) 해외사례는 김수정(2014)을 재인용

11) 세부적으로 영세 중소기업 5%, 여성중소기업 5%, 낙후지역기업 3% 등 설정

4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미국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8(a)프로그램, SBIR, STTR, 조달정보네트워크(CCR)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8(a) 프로그램은 미국 ‘중소기업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 각 기관은 먼저 중소기업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청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해당 중소기업이 특정 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책임이 있음을 구매기관에 증명하고, 중소기업청과의 계약은 계약관의 재량 하에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진다.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제도는 중소기업의 잠재적인 기술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중소기업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가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이 위험도가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연구개발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대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제품·서비스의 상품화를 지원한다.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제도는 새로운 중소기업지원 주요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연방개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운영의 핵심은 주요 비영리 연구기관을 포함한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민·관 합동 협력체제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21세기에 맞이할 과학기술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간의 컨소시엄에 연방정부 연구개발기금의 일정비율을 할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조달정보 네트워크(CCR: Cental Contractor Registration)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검색엔진이자 데이터베이스이다. 연방정부에 납품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기관별, 부서별로 기업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994년 ‘연방조달절차법(FASA: Federal Acquisition Streaming Act)’에 의거하여 만

들어졌으며 1998년 5월부터 국방성 조달 참여업체에 대해 CCR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2002년 10월부터 연방정부 전체계약자에 대한 데이터가 CCR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조달정보 네트워크 PRO-Net(Procurement Marketing and Access Network)도 2004년 1월 1일부터 CC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일본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일본의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책인 관공수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공구매 할 때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관공수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기관의 수요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경영향상과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발되었다(조영태, 2007).

1963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법을 기초로 1966년 관공수확보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경쟁 입찰을 기본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업체들이 관공수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격심사를 받아서 입찰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수의계약도 이러한 자격이 있는 등록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각의에서 공공구매기관의 계약 방침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방침에 따라 적격조합제도와 같은 다양한 관공수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이다(이재무, 2008).

적격조합제도는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 수주가 어려운 공동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수의계약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직접적 수주 증대보다 수주기회의 확대와 공공기관 선택의 폭 확대라는 편의제공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 지원에도 활용정도는 미비한 편인데 그 이유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구매기관 발주 요건에 적합한 조합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적

4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격조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러한 자격심사를 통해 적격조합은 입찰에서 특별조치에 근거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공입찰 참여가 가능한 일반조합은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또한 적격조합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격에 불과할 뿐 수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주를 위해 각 조합들이 적극적 영업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 적격조합에 대해 공공수주 체제와 물량배정 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등 정부는 감독과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관공수제도와 적격조합제도는 다른 서구의 선진 국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책과는 다소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합 형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

3. 캐나다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캐나다는 중앙조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1993년 7월 설립한 공공사업·정부업무부(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기관으로 재무위원회가 있으며 재무위원회에서는 범정부적 조달 정책 및 제도총괄, 계약 정책(Treasury Board Contracting Policy), 재무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 조달부법(DPWGSC Act), 무역협정, 정부물자관리정책 등을 총괄한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PWGSC는 연방정부 내 각 부처 및 연방정부 출자기관 등에 각 부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WGSC는 모든 조달행위를 공개성, 공평성, 정직성에 기반을 두고 ‘정부계약법(The 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에 의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국정목표에 합치, 완전경쟁지향, 공평성, 신뢰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PWGSC 내에 중소기업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공공구매에 대한 접근

성 제고와 수주기회 확대를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사무소의 주요 목적은 캐나다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공구매에서 효율성, 경제성, 무결성을 추구하고 정부와의 사업에서 더 좋은 정보와 더 훌륭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4. 영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특혜를 주기보다는 소수민족, 장애인, 여성기업인 등 마이너 그룹의 진출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수행하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접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의 입찰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에 대하여 입찰참여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사업에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금액대비 가치(VfM: Value for Money)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면 중소기업도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중소기업은 정부조달에서 대기업과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시장의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자기업지원을 위한 SCA(SCA: Special Contract Arrangement)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처럼 일정량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격성 조사(VfM: Value for Money)에 의한 구매성격으로 운영한다. SCA는 1994년에 종전의 우선공급자 정책(PSS: Priority Suppliers Scheme)을 대체한 것으로서 EU국가내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조달관들은 다른 공급자들과 공정성을 유지하는한 SCA에 의해 등록된 기업들과 조달계약을 증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2-3-1> 해외의 공공구매제도 추진 목적 및 내용

구분	추진 목적 및 내용
미국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공정 비율을 확보 공정비율 확보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 정부조달시장 내 공정비율 확보를 위한 총괄목표(23%) 설정
일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수주기회 제공 중소기업의 직접적 수주 증대보다 수주기회 확대에 초점(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객관적 자격심사기준 마련
캐나다	공개성, 공정성, 정직성 기반의 공개경쟁을 원칙 서비스, 국정목표 합치, 완전경쟁, 공정성, 신뢰성 원칙 공공구매 접근성 제고와 수주기회 확대 지원으로 중소기업 참여 증대
영국	소기업 진출 장벽 해소 정보접근 어려움 해소 정부조달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해외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추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불리한 조건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시장으로의 접근 장벽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공급확대는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을 높이는 것으로 대표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얼마나 달성되었나를 기준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서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

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있도록 유도하며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기업의 제품도 의무적 구매가 아니라 정보력이 약한 기업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지불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여러 국가의 공공구매제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가질수 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들을 제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중소기업 또한 스스로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기술 개발, 가격경쟁력의 제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공공시장 역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소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사 및 용역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가능한 한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유도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제도의 방향성에 있어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사회정책적인 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품질 및 생산성 저하와 자생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의욕 저하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실제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저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 실적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구매제도와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추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불리한 조건들을 보완하고 시장 접근 용이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지불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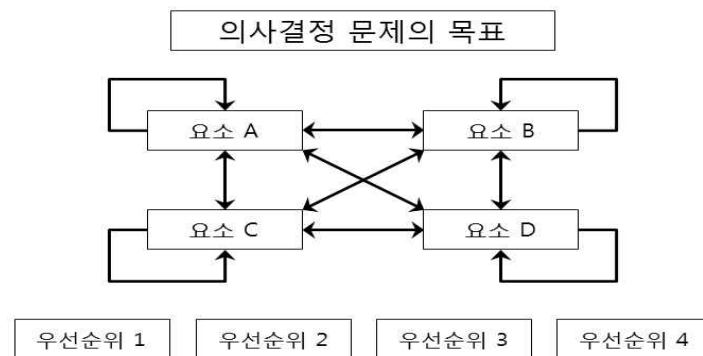
이처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은 불리한 조건들을 제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중소기업 또한 스스로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기술 개발, 가격 경쟁력의 제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공공시장 역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의 실행 주체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세계화, 개방화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공공구매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P 분석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확장한 방식으로 대행렬(Super-matrix)을 활용하여 극한 특성(Limiting Properties)을 구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분석 모델이다. 또한 ANP 모델은 다기준 분석법(Multi Criteria Analysis)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피드백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중요도 도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ANP 모델은 Thomas. L. Satty에 의해 제안된 우선순위 분석 방법론으로 정성적 지식을 활용하여 평가요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요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2-4-1] ANP의 일반적 상호관계



ANP 모델은 정책 방향성 정립을 위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는 분석방법론으로써 다수의 논문 및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양한 정책 정립에 반영되고 있다.

먼저, 분석을 위하여 앞서 연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공공구매 개선 방향, 해외사례, 선행연구 시사점 등을 기준으로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분하였다.

정책적 목표(Cluster)로는 크게 ‘중소기업 기반의 국가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중기간 경쟁제품 실효성 제고’로 목표를 선정하고 목표 별 세부 달성 과제(Node)로써 다음 <표 2-4-1>와 같은 세부 정책을 정립하였다.

<표 2-4-1> 최종 기준집합(Cluster) 및 세부요소(Node)

과제	세부과제
중소기업 기반의 국가경쟁력 제고 (A)	a.1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품질, 기술, 가격) 경쟁력 제고
	a.2 신성장동력 분야(고부가가치 산업) 자율경쟁 확대
	a.3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B)	b.1 중소기업 자생력 향상
	b.2 시장접근성 해소(향상)
	b.3 공경경쟁 환경 조성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 실효성 제고 (C)	c.1 산업 발전 기여도 확대
	c.2 지정제도의 정량적 판단기준 마련
	c.3 정책평가 시스템 개선

ANP 모델을 활용한 공공구매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 1차 전문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의사결정 문제를 목표(Goal), 기준집합(Cluster), 세부요소(Node)들로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작성하고 요소들 간의 상호 종속성과 피드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및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1차 조사로부터 선별된 구성항목을 기초로 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으며 수집데이터를 ANP 분석 소프트웨어(SUPER DECIS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우선순위 결과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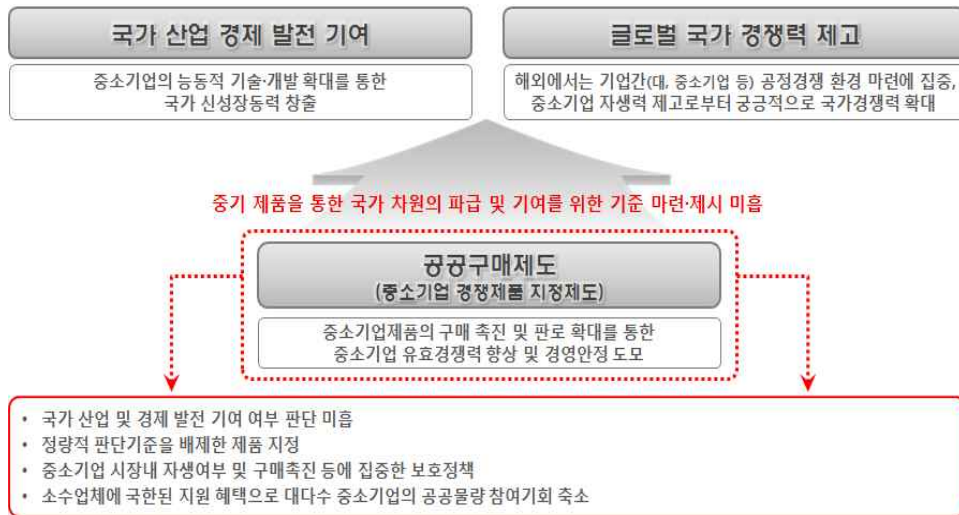
<표 2-4-2>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향(ANP 분석 결과)

상위변수 (Cluster)	하위변수 (Node)	극한행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A	a.1	0.145435	3
	a.2	0.074968	7
	a.3	0.073295	8
B	b.1	0.173592	1
	b.2	0.164532	2
	b.3	0.085639	6
C	c.1	0.124538	4
	c.2	0.108965	5
	c.3	0.049036	9

분석결과, 국가·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공공구매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써 중소기업 자생력 향상(17.4%)을 위한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16.5%),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향상(14.5%), 산업발전 기여 확대(12.5%), 지정제도의 정량적 판단기준 마련(10.9%) 등의 순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즉,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는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정책이 아닌 시장접근성 해소 및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자생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분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등 지원제도에서 정량적·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2]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향



제3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제1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현황

제2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분석

**제3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현황**

**제4절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분석**

제5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피해사례

제 3 장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제 1 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현황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관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6년 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 제도¹²⁾의 시행에 따라 이전의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물품을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관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정 제품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국내 직접 생산·납품 중소기업’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 1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른 판로 축소 등 경영애로 사례 및 관련 통계 조사로 필요성 인정 시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직접 생산·납품 중소기업 기준을 5개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림 3-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



12) 2004년 12월 31일 「관로지원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제도를 시행(2006년 1월 1일)

2014년 11월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총 207개 제품이 지정 중이며 이중 산업군(총 12개) 구분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과 연관된 전자·정보통신부문의 지정 제품은 총 14개 제품군(77개 세부품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쟁제품의 경우 2014년에 총 207개로 전년대비 5개 제품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분류기준 신규품목으로는 철제교량난간,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중양분리대 등이 새로운 품목으로 지정·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연도별)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경쟁제품수 (제품군/세분류/ 세부분류)	207개 / 593개 / 816개	202개 / 587개 / 803개	202개 / 586개 / 802개
신규품목 (세부분류기준)	철제교량난간,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중양분리대, 전동식 의료용 침대, 화물용 엘리베이터, 즉석건조식품, 잼류, 복합조미식품, 태양광발전지, 도로용혼합골재, 빗물저장탱크(스테인레스), 다소성페턴타일, 입체문양타일, 빗물저장탱크(FRP제품), 빅데이터분석서비스	LED램프용안정기, 소프트웨어 패키지개발 및 도입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데스크탑컴퓨터, 일체형컴퓨터	-
통합된 품목 (세부분류기준)	매트리스패드, 부하개폐기	누비이불, 콘크리트기초, 진투복, 잠바, 파카, 데이터베이스정보검색관련용역, 프로그래밍 및언어관련용역	-
전자·정보통신 품목	-	데스크탑컴퓨터, 일체형컴퓨터	-

※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표 3-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류

산업군	제품군
1.가구	(5) 가구,문,썩크대,전동식의료용침대,창
2.금속	(22) 가드레일,가로등주,구기운동용구,금속올타리용철물,난간,돌망태,방음판및방음벽,보일러및구성품,스테인레스물탱크,쓰레기통,외벽패널,육상경기용구,일반철물,전광스코아판,조립식구조물,주물제품,창,철망,체력단련기구,공원체육시설,케이블트레이,파형관
3.기계	(40) 공기살균기,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용관리기계,대형냉장고,모터펌프,무대장치,밸브,분사장비및약제,상업용오븐,소방기,소방용방제장치,소방자동차,송풍기,수문,승강기,약품투입기,여과기,열교환장치,음식물쓰레기처리기,응집기,일체형청정장비,자외선살균기,재활용품자동선별기,정수기,주차장치,취사용기구,컨베이어시스템,크레인,탈수및배수장치,탈취기,통상여과기,파쇄기,팬코일유닛,펠릿연소기기,폐기물소각로,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향온향습기,혼합기및교반기
4.목재, 종이	(8) 각재,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방부목,종이포대,종이제문구,판재,합성목재,화장지
5.섬유	(26) 가방,기동복,내의,매트리스및카바,모포·담요,배낭및조끼류,벨트,섬유로프,수건·타월,스웨터,양말,요대류·멜빵류,운동복,의류대,이부자리,작업복및근무복,잠바,장갑,정복,천막류,침낭,카바류,커튼,토목섬유,폴리에스테르직물,혼방소모직물
6.식품	(14) 건빵,고추장,김치,된장,면류,빵,생선묵튀김,스프류,식육가공품,잼류,조미김,통(병)조림,혼합간장,혼합조미료
7.인쇄, 광고물 등	(9) 견장및어깨장식,광고판,기념품,실물모형,안내(표지)판,인쇄물,전시대,표시물,현수막
8.전기	(23) 가로등기구,경관조명기구,계장(계측)제어장치,교통신호등,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비닐절연전선,수도미터,애자,유량계,자동점멸기,자동제어반,전기스탠드,전기용연선,전력량계,충전장치,태양광발전장치,프로세스제어반,실내조명기구
9.전자·정보통신	(14) 개인컴퓨터,구내방송장치,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다중화장치,데이터포트장치,무선통신장치,산업용컴퓨터,손목시계,열차행선안내장치,유·무선원격제어장치,전광판,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출입통제시스템,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19) 레미콘,맨홀박스,석재,석회석,토양개량제,세라믹기와,아스팔트콘크리트,점토벽돌,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순환골재,천연골재,철근콘크리트관,철근콘크리트근가,콘크리트배수로,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블록,콘크리트파일,타일

11.화학	(15) 강관,고무발포단열재,수량계보호통,전선관,재활용토너카트리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폴리에틸렌제품,플라스틱병,폴리에틸렌필름,폴리염화알루미늄,플라스틱자루,활성탄,FRP제품및SMC포함,PVC관
12.기타	(12) 건축물일반청소업,경비업,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도로수송서비스,선박,승강기유지보수,자료처리업무,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전시부스설치용역,전시홍보관설치용역,지질조사및탐사업,측량
12	207

산업군별 제품군을 살펴보면 기계부문의 경쟁제품 지정이 40개(전체 대비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부문이 5개(2.4%)로 가장 낮은 지정을 보이고 있다. 세분류 및 세부분류에 있어서도 기계부문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식품의 경우에는 대체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3> 산업별(산업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2014년 기준)

번호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가구	5	2.42%	51	8.60%	56	6.86%
2	금속	22	10.63%	53	8.94%	101	12.38%
3	기계	40	19.32%	133	22.43%	188	23.04%
4	목재, 종이	8	3.86%	13	2.19%	14	1.72%
5	섬유	26	12.56%	57	9.61%	66	8.09%
6	식품	14	6.76%	23	3.88%	24	2.94%
7	인쇄, 광고물 등	9	4.35%	39	6.58%	55	6.74%
8	전기	23	11.11%	41	6.91%	80	9.80%
9	전자·정보통신	14	6.76%	65	10.96%	77	9.44%
19	콘크리트, 레미콘 등	19	9.18%	23	3.88%	43	5.27%
11	화학	15	7.25%	32	5.40%	46	5.64%
12	기타	12	5.80%	63	10.62%	66	8.09%
합계		207	100%	593	100%	816	100%

5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만을 선별하면 전자·정보통신부문의 14개 제품군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은 10개 제품군, 17개 품목, 28개 세부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현황(2014년 기준)

번호	제품군	품명	세부품명
1	구내방송장치	구내방송장치	구내방송장치
2	다중화장치	광다중화장치	광다중화장치
		다중통신장비	다중통신장비
		시분할다중화장치	시분할다중화장치
3	데이터포트장치	네트워크채널또는 데이터서비스유닛	데이터포트장치
			다지털서비스유닛
			채널서비스유닛
4	무선통신장치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무선통신송신기
			무선통신장치
			암호송신기
		양방향라디오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5	열차행선안내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6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원격접속장치	원격접속장치
7	전광판	전광판	교통정보전광판
			기상전광판
			안내전광판
8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동보장치	동보장치
		자동안내장치	자동안내장치
		배선반	구내단자함
			국선단자함
			본배선반
			중간배선반
9	출입통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10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영상감시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판독기	차량번호판독기
합계	10	17	28

6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먼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하여 지정 경쟁제품의 특성을 물품, 업체, 속성 등으로 정의하고 정책추진 기관의 관점과 정책수요 업체 관점에서 공급금액, 지원집중도, 제품경쟁도, 업체참여도 등을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분석¹³⁾하였다.

[그림 3-2-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대상품목 특성별 분류 기준

지표명	세부지표			
	공급금액	지원집중도	제품경쟁도	업체참여도
산출식	해당품명별 총 공급금액	상위 10% 업체 공급규모 (수량/금액) / 전체업체 공급규모	해당품명의 중소기업 시장비중 / 해당품명 전체 기업(대기업포함) 시장비중 ※ 대기업이 없을 경우 중기간 경쟁도는 Value '0'	해당품명 조달시장 참여업체 수 / 해당품명 전체 참여 업체수
자료원천	2010~2012.6년 중기간 경쟁제품 공급실적	2010~2012.6년 중기간 경쟁제품 공급실적	2010~2012.6년 중기간 경쟁제품 공급실적	2010~2012.6년 중기간 경쟁제품 공급실적
자료확보 여부	✓ 1차 자료 확보 완료 ✓ 10~12년 분석 완료	✓ 1차 자료 확보 완료 ✓ 10~12년 분석 완료	✓ 1차 자료 확보 완료 ✓ 10~12년 분석 완료	✓ 1차 자료 확보 완료 ✓ 10~12년 분석 완료
종합 평가 결과	<div>지정적합도</div> $\sum_{i=1}^n (\text{공급금액} * w_1 + \text{지원집중도} * w_2 + \text{제품경쟁도} * w_3 + \text{업체참여도} * w_4)$ <div> n: 분석대상품명수 w_i: 세부지표별 가중치 ※ 가중치(w)의 경우 Delphi Method 적용¹⁾ </div>			<div>지원집중도 및 공급금액으로 인한 유흥 현상 개선방안 제시</div>

주1) 델파이 기법 [Delphi technique , ? 技術] : 미국의 랜드(Rand)사에서 최초 적용한 의사결정 방법으로써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통합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다양한 사회현상에서 우선순위를 확인 또는 서열화 하는데 활용

급금액 비중 60% 이상으로 적은 입찰실적이 나타나는 경쟁제품에서 특정 업체의 독식 행태가 나타나는 분야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 기준

구 분	적합	고려	부적합
시장규모	600억 이상	20억 이상 ~ 600억 미만	20억 미만
참여업체	100업체 이상	100업체 이상	10업체 미만
편중현상 (상위 10%업체 공급금액 비중)	40% 이하	50% 이하	60% 이상

이와 같은 지정적합 기준을 바탕으로 제품군별 적합도에 따른 산업별(산업군) 적합 분석결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 산업은 콘크리트·레미콘 등으로 나타났으며(3개년 평균('10년~'12년)) 다음으로 도로수송, 선박, 전산 등이 포함된 기타부문과 금속이 지정 적합 산업군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제품품목의 포함 산업군인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8순위로 나타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의 적합성이 낮은 산업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산업군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 평가

순위	산업군	평균점수	순위	산업군	평균점수
1	콘크리트, 레미콘 등	73.2	7	전기	67.6
2	기타	73.0	8	전자·정보통신	66.7
3	금속	71.1	9	인쇄, 광고물 등	63.3
4	가구	71.0	10	목재, 종이	62.3
5	화학	70.0	11	섬유	57.7
6	기계	69.5	12	식품	42.0

6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구체적으로 적합도 분석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평균점수는 68.0으로 나타나, 대부분 적합하지 않은 ‘고려필요’ 또는 ‘부적합’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10개 제품군의 3개년 분석 결과에서는 적합(4), 고려(12), 부적합(5), 분석제외(8)로 분석¹⁴⁾되었다.

<표 3-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품군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적합도 분석 결과

제품군	2010년			2011년			2012년		
	순위	점수	판단	순위	점수	판단	순위	점수	판단
구내방송장치	82	72	고려	103	69	고려	60	75	고려
다중화장치	121	63	부적	16	81	적합	37	78	적합
데이터포트장치	188	-	-	188	-	-	183	-	-
무선통신장치	110	67	고려	106	69	고려	74	73	고려
열차행선안내장치	187	-	-	187	-	-	156	35	부적
유무선원격제어장치	153	47	부적	142	56	부적	155	35	부적
전광판	49	76	적합	54	76	고려	69	74	고려
전화교환기 네트워크연결장치	62	75	고려	68	75	고려	82	72	고려
출입통제시스템	-	-	-	-	-	-	-	-	-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39	77	적합	59	75	고려	39	77	적합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별 지정적합도에 대한 연도별 분석 결과는 (조달청, 2012) 참고

다음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를 위한 적합 업종 분석을 위하여 산업연관성 분석을 통한 거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산업 형태에 따라 산업군을 크게 1,2,3,4,5 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3-2-4> 형태별 산업 분류

구분	산업
1차산업	농·임·수산업
2차산업	광업·제조업
3차산업	서비스업·사무업, 판매업
4차산업	정보·통신·금융·공무·의료·연예·교육
5차산업	유전공학·우주·항공

형태별 산업 분류에 따른 물품 특성에 따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은 크게 2차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거시지표 활용을 위하여 국가 분류체계에 따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2-5>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과 국가 산업구분과의 연계

번호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산업군	국가 통계 산업군	번호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산업군	국가 통계 산업군
1	가구	가구	7	인쇄·광고물	인쇄
2	금속	비철금속, 조립금속	8	전기	전기기기
3	기계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9	전자·정보통신	전자부품, 방송통신 서비스
4	목재·종이	제지	10	콘크리트·레미콘	시멘트
5	섬유	섬유	11	화학	석유화학, 정밀화학
6	식품	음식료	12	기타	-

※ 국가 통계 산업군 구분은 산업연구원 산업통계(ISTANS)의 산업구분을 적용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 중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품목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로써 이는 방송통신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국가 통계 산업군에 방송통신 서비스 부문을 고려 대상에 포함하였다.

앞서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가차원의 거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산업군)연관 분석(Industry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2-6> 산업연관성 분석 특이사항

구분	산업연관분석
정의	-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
활용성	- 국가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나누어 직·간접 효과 분석 가능 - 경제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 예측이나 정책효과 분석도구로 활용
방법론	- 각 산업의 투입구성 및 수요 구성, 부가가치 및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을 이용

※ 출처: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보험개발원, 2009)

즉,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품목은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제조품은 산업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공공발주 물량에 있어 특정 사업자(중소기업)의 성과 창출에 활용됨으로써 시장 자율경쟁 저하에 따른 해당 품목의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며 거시적 영향력 판단을 위해 적용한 기준에 따라 도출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자율경쟁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경쟁,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 내 지정품목 축소가 필요함을 가정하고 거시적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경제성장 기여

도 분석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결과 금속(1.10%p)과 기계(1.07%p)부문 산업군이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화학, 전기, 섬유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7순위(0.28%p)로 분석되어 경제성장기여도에는 타 산업 대비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기여도 분석에 활용된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경제성장기여도}(\%p) = \frac{\text{연간 불변부가가치 증가액}}{\text{전년도 불변 GDP}} \times 100$$

<표 3-2-7>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

구분	기여도				경제성장률 기여도	순위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평균		
가구	1.13	-0.37	1.03	0.60	0.06%p	10
금속	2.67	1.37	-0.50	1.18	1.10%p	1
기계	2.65	1.17	0.25	1.36	1.07%p	2
목재·종이	0.78	2.65	-0.14	1.10	0.18%p	9
섬유	3.63	1.04	-0.14	1.51	0.45%p	5
식품	1.03	0.11	0.60	0.58	0.38%p	6
인쇄·광고물	-0.19	-1.00	0.32	-0.29	-0.02%p	11
전기	1.45	1.05	1.58	1.36	0.53%p	4
전자·정보통신	-0.09	0.73	0.91	0.52	0.28%p	7
콘크리트·레미콘	0.01	2.55	2.08	1.55	0.19%p	8
화학	2.25	-0.43	0.77	0.87	0.90%p	3

※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이며, 전체 GDP 중 해당산업 GDP 규모 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다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산업군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고용유발인원 등으로 분석한 국가 발전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산업연관분석) 분석결과, 전자·정보통신(평균 순위) 산업군의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인쇄광고물, 식품, 콘크리트·레미콘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관성 분석을 위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표 3-2-8> 산업연관성 분석 적용 산정식

구분	산정식
생산유발액	총산출액 x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	총산출액 x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인원	총산출액 / 10억원 x 고용유발계수

세부적으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 산정으로부터 도출된 산업군별 가장 높은 부가가치 산업군은 전자·정보통신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자·정보통신 산업 부문이 국가차원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는 산업이며 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고용유발 효과에서는 기계 산업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이 포함된 전자·정보통신부문은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거시적인 파급효과에 있어 높은 부가가치 창출(1위/12)과 고용확대(4위/12)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의존도는 해당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자생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정제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자율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내의 전자·정보통신 부문의 축소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2-9> 파급효과 분석결과(2012년 기준)

(단위: 십억원, 천명)

구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부가가치율	순위	고용유발 효과	순위
가구	52,043	9,382	18.03%	5	149	9
금속	514,885	77,373	15.03%	9	672	2
기계	421,351	75,199	17.85%	6	771	1
목재·종이	80,284	14,056	17.51%	7	150	8
섬유	167,352	24,445	14.61%	10	345	6
식품	315,109	61,879	19.64%	3	659	3
인쇄·광고물	22,350	5,475	24.50%	2	90	11
전기	207,547	32,246	15.54%	8	313	7
전자·정보통신	227,752	56,545	24.83%	1	584	4
콘크리트·레미콘	61,553	11,699	19.01%	4	120	10
화학	624,662	59,942	9.60%	11	453	5

※ 각 유발계수는 산업연구원 산업통계(ISTANS) 자료 활용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절차상 지정 추천과 협의를 통한 공고로 해당 제도 내 지정 품목으로 편입된다. 즉, 지정품목의 중소기업 시장을 포함한 산업과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과급 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배제하고 제조시설 보유 여부 등에 따른 해당 품목의 보호 유무 판단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절차는 대규모 공공시장에서 제조·납품을 비롯한 설치·시공 부문까지 타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쟁(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간) 축소에 따른 기술개발 및 투자 수요를 축소시키게 되며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사회 환경에서 해당 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앞선 해외사례에서도 검토하였듯이 해외의 공공구매제도 및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의 불리한 조건을 보완해 줌으로써 시장으로의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의 경우,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소기업 보호제도’를 1967년 도입하였으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기업업종에 허용된 기준을 따르려면 사업을 확장할 수 없어 기술개선 및 생산 등에 대한 투자 감소와 고용 성장 정체, 수출 실적 감소 등 중소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는 판단으로 제도를 폐지(예정) 하였듯이 우리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더 나아가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정책으로 활용·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심사숙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제 3 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현황

최근 들어 정보통신 환경은 ICT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스마트 융합에 따라 인터넷신산업과 관련한 신부가 가치 창출 기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스마트융합을 활용한 새로운 창조적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하여 핵심기반 시설인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빠른 전송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망고도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CT 융합추세 가속화에 따라 네트워크 고도화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ICT기반의 스마트융합 환경에서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ICT 산업생태계의 모체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산업으로써 스마트시대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에 따라 새로운 융합사업 등 확대 영역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시공품질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공법개발, 융합형 시공기술의 개발, R&D 투자 등의 시공품질, 시공 전문성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 수용 및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 부문의 중요성과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장비·시공분야 고도화 요구에 따라,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에 포함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제품에 대한 시공품질 및 기술고도화도 적극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업체수 및 직접생산 현황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세부품명별 취급업체는 전체 공사업체(7,948개, '13년 기준)대비 평균 3.46% 수준이며 취급업체 중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취급업체 대비 평균 32.87%, 전체업체 대비 평균 1.39%에 그치고 있다.

7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표 3-3-1>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취급 및 직접생산 업체수 현황

번호	세부품명	현황			전체 공사업체 대비	
		취급업체	직접생산업체	직접생산비율	취급업체	직접생산업체
1	구내방송장치	892	456	51.1%	11.2%	5.7%
2	광다중화장치	78	28	35.9%	1.0%	0.4%
3	다중통신장비	69	15	21.7%	0.9%	0.2%
4	시분할다중화장치	32	15	46.9%	0.4%	0.2%
5	데이터포트장치	48	11	22.9%	0.6%	0.1%
6	디지털서비스유닛	42	10	23.8%	0.5%	0.1%
7	채널서비스유닛	41	10	24.4%	0.5%	0.1%
8	무선통신송신기	196	37	18.9%	2.5%	0.5%
9	무선통신장치	271	54	19.9%	3.4%	0.7%
10	암호송신기	150	-	-	1.9%	-
11	무선송수신기	80	31	38.8%	1.0%	0.4%
12	양방향라디오	53	29	54.7%	0.7%	0.4%
13	열차행선안내장치	84	44	52.4%	1.1%	0.6%
14	원격접속장치	172	49	28.5%	2.2%	0.6%
15	교통정보전광판	558	179	32.1%	7.0%	2.3%
16	기상전광판	78	25	32.1%	1.0%	0.3%
17	안내전광판	607	194	32.0%	7.6%	2.4%
18	동보장치	147	27	18.4%	1.8%	0.3%
19	자동안내장치	63	17	27.0%	0.8%	0.2%
20	구내단자함	86	23	26.7%	1.1%	0.3%
21	국선단자함	85	22	25.9%	1.1%	0.3%
22	본배선반	81	21	25.9%	1.0%	0.3%
23	중간배선반	81	21	25.9%	1.0%	0.3%
24	통합배선반	128	22	17.2%	1.6%	0.3%
25	출입통제시스템	226	131	58.0%	2.8%	1.6%
26	영상감시장치	1,591	837	52.6%	20.0%	10.5%
27	보안용카메라	1,541	590	38.3%	19.4%	7.4%
28	차량번호판독기	233	83	35.6%	2.9%	1.0%

※ 전체 공사업체수는 '13년 말 기준(7,948업체) 적용

※ 직접생산업체 정보 산출이 어려운 암호송신기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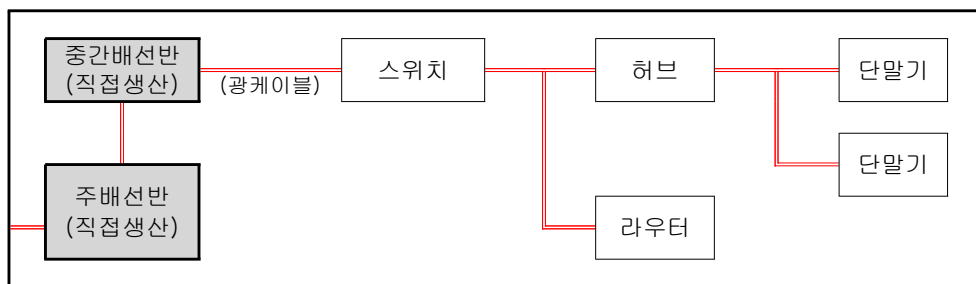
또한, 「판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을 해당제품 직접

생산 중소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정보통신 공사업 부문에서 일부 공사업체(1.39%)만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취급됨으로써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은 산업 및 공사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물품은 용도 구현 상, 일부 구성품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을 앞세워 경쟁제품으로 통합 발주¹⁵⁾함으로써 대다수 공사업체의 참여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특정사례에서 경쟁제품 지정 품목인 통합 배선반(주배선반, 중간배선반 등)의 포함을 이유로 발주 공공기관은 다른 장비(스위치, 허브, 단말기) 및 광케이블까지 포함해 1건으로 발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통합배선반 직접생산자('15년 5월 기준, 22업체)로 한정함으로써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 경우, 입찰이 가능한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전체 공사업체 중, 0.3%(22개업체)에 불과하게 된다.

[그림 3-3-1] 중기간 경쟁제품(통합배선반) 발주 사례(○○중앙계약관, '14.5.15)



※ LAN/인터넷장비 도입건

15) 발주기관(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이 포함된 납품·공사물량을 다른 장비 등과 묶어 경쟁 제품으로 발주

2.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 현황

중기간 경쟁제품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경쟁제품 입찰건수(전체 1524건)는 2014년 기준으로 구내방송장치(44.9%), 동보장치(14.8%), 안내전광판(8.1%), 통합배선반(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입찰건수 미발생 품목도 정보통신부문 경쟁제품 지정 세부품목 28개 중 7개로, 25%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이 입찰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동기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지정품목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약 91.1%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발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 우선조달에 따른 우선구매 적용금액(2.1억원)¹⁶⁾ 기준 실적은 91.9%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대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 금지 규정과 중소기업 우선조달 체결 의무화로 인해 대부분 지정품목 내 입찰 경쟁이 중소 공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입찰시장의 규모는 649.6억원¹⁷⁾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정품목의 입찰이 중소공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품목의 건전한 입찰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지정품목 입찰의 가장 큰 제약조건인 직접생산업체의 입찰참여 가능 조건으로 인해 해당 품목 생산 중소기업의 보호장치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품목의 입찰은 전체 공사업체 대비 전체 취급업체 기준 3.46%, 직접생산업체 기준 1.39%¹⁸⁾의 공사업체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16)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을 통한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우선조달 물품·용역금액을 기존 2.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변경하고 낙찰자 선정방식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만 최저가 낙찰제 적용)로 개선(‘15.1~’16.말까지 적용)

17) 입찰 금액 항목기준별 평균 금액으로 환산

18) 입찰 가능 비율 중 전체 취급업체 기준은 세부품명별 취급업체 비율(취급업체/공사업체 전체) 평균이며, 전체 공사업체 기준은 직접생산업체 비율(직접생산업체/공사업체 전체) 평균임

상황이다.

또한 전체 품목 중, 10%에 해당하는 상위 3개 품목¹⁹⁾ 수주 총액은 423.2억 원으로 전체의 6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보장치 및 통합배선반의 경우에는 직접생산업체 기준의 제약으로 전체 공사업체 대비 0.3%만이 입찰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발주 물량 대부분이 중소기업 우선조달 적용 입찰건(91.9%, 2014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업체에 편중됨으로써 다수의 공사업체의 입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간 자율 시장 경쟁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3-2> 정보통신공사업 경쟁제품 지정품목의 공공부문 입찰 현황(2014년 기준)

번호	세부품명	입찰 건수	규모별 입찰건수 및 비율									
			0.5억 미만		0.5억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		2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구내방송장치	684	591	86.4%	30	4.4%	38	5.6%	23	3.4%	2	0.3%
2	광다중화장치	41	9	22.0%	13	31.7%	7	17.1%	3	7.3%	9	22.0%
3	다중통신장비	4	3	75.0%					1	25.0%		
4	시분할다중화장치	1									1	100.0%
5	데이터포트장치	1			1	100.0%						
6	디지털서비스유닛	-										
7	채널서비스유닛	-										
8	무선통신송신기	8	5	62.5%	3	37.5%						
9	무선통신장치	42	23	54.8%	10	23.8%	2	4.8%	1	2.4%	6	14.3%
10	암호송신기	2			2	100.0%						
11	무선송수신기	64	32	50.0%	13	20.3%	7	10.9%	5	7.8%	7	10.9%
12	양방향라디오	10	5	50.0%			4	40.0%	0	0.0%	1	10.0%
13	열차행선안내장치	10	2	20.0%	1	10.0%	1	10.0%	2	20.0%	4	40.0%
14	원격접속장치	8	4	50.0%	2	25.0%	1	12.5%			1	12.5%
15	교통정보전광판	34	19	55.9%	5	14.7%	3	8.8%	3	8.8%	4	11.8%

19) 구내방송장치(29.15%), 동보장치(16.67%), 통합배선반(10.40%)

7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16	기상전광판	-										
17	안내전광판	124	103	83.1%	10	8.1%	2	1.6%	4	3.2%	5	4.0%
18	동보장치	225	133	59.1%	38	16.9%	35	15.6%	10	4.4%	9	4.0%
19	자동안내장치	21	15	71.4%	3	14.3%			2	9.5%	1	4.8%
20	구내단자함	1			1	100.0%						
21	국선단자함	3	3	100.0%								
22	본배선반	-										
23	중간배선반	-										
24	통합배선반	102	31	30.4%	38	37.3%	18	17.6%	9	8.8%	6	5.9%
25	출입통제시스템	80	37	46.3%	19	23.8%	17	21.3%			7	8.8%
26	영상감시장치	-										
27	보안용카메라	-	정보 없음									
28	차량번호판독기	59	36	61.0%	4	6.8%	10	16.9%	2	3.4%	7	11.9%
합 계		1,524	1,051	69.0%	193	12.7%	145	9.5%	65	4.3%	70	4.6%

※ 미발생 현황은 공란으로 처리

※ 세부품목별 입찰 10건 미만 기준 품목도 15개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품목(28품목) 중 53.6%가 입찰건 발생이 미미한 제품으로 나타남

<표 3-3-3> 중소기업 제품 우선조달 범위 내 공공기관 발주 현황(2014년 기준)

2.1억원 미만	2.1억원 이상	비율(2.1억원 미만)
1401건	123건	91.9%

3.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기술 개발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관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게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의 경우, 중소기업

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는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 등이 있다.

또한,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성능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정품목 취급 중소기업은 신기술 및 신제품 창출보다는 발주처(공공기관)의 발주 물량에 대한 입찰 경쟁력(가산점, 우선구매 등) 제고를 위한 관련 인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인증제도 및 개요

제도	개요
NET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 또는 도입 기술의 개량을 통한 신기술에 부여하는 마크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신뢰성 제고 및 구매력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
NEP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 • NET와 함께 국내 신기술과 신제품을 인증해 줌으로써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 활용과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

7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전력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개발 전력기술 또는 해외 도입·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이 인정된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도입 • 업체 및 개인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와 국내 전력기술 발전 도모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입
성능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기술의 품질과 생산(납품)이행능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는 것
GS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시험인증센터의 각종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한 자 또는 승계인에게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
GD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od Design마크로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디자인 분야의 정부인증 마크 • 산업기술개발 자금 지원시 우선지원, 중소기업청 유망선진기술 기업 선정 평가점수 반영, 조달청 시행 우수제품 선정 가산점 부여, 정부 정책자금 지원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여 특전 등 부여
실용신안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보다 낮은 발명에 부여하는 지식 재산권의 일종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 발생(실용신안법 21조)
의장(디자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이 남에게 모방, 도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도입 • 의장의 고안자이거나 고안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 등록 가능

즉, 성능 및 품질, 진보성 등을 창출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등에 대한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전력신기술 인증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반면 수주확대 및 각종 권리 행사에 활용이 가능한 성능인증, GS인증, 특허, GD인증, 실용신안등록, 의장(디자인)등록 등의 취득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은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중기간 경쟁제품 취급업체의 대부분이 중소·소상공인 규모로 인한 기술개발 투자 및 유인의 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실정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3-5>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기준

구분	내용	기준	근거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미만 	

※ 중소기업 및 소기업 구분 기준은 <표 2-1-1>참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소·소상공인 업체비율은 평균 73.6%이며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NET, NEP, 전력신기술 개발은 세부품명별 평균 0.64건²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의 소규모에 따라 기술개발보다는 경영환경 및 수익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세부 기술인증별 취득 현황에서도 지원사항 등에 따라 업체 규모별로 신기술개발 > 입찰경쟁력 제고 > 권리확대 순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신기술 개발은 중소기업 중심, 소기업의 경우에는 공공발주 입찰 참여 및 수주 확대를 위한 성능 인증 및 GS 인증 등, 소상공인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등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건 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하여 권리확대 및 입찰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한 인증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품목별 인증 현황은 [별첨 1] 참고

7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표 3-3-6>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경쟁제품 지정품목 취급업체별 기술인증 실적
(2014년 기준)

구분	업체수 (품명별 전체)	신기술개발 (NET, NEP, 전력)	입찰경쟁력제고 (성능인증, GS인증)	권리확대 (특허, GD인증, 실용신안, 의장)
중기업	550	8(1.5%)	88(16.0%)	398(72.4%)
소기업	1982	9(0.5%)	273(13.8%)	1457(73.5%)
소상공인	3232	1(0.0%)	184(5.7%)	1771(54.8%)

※ 신기술 개발: NET인증, NEP인증, 전력신기술

입찰경쟁력 제고: 성능인증, GS인증

권리확대: 특허, GD인증, 실용신안등록, 의장(디자인)등록

()는 업체 규모별 해당 신기술개발 관련 실적 보유 평균

<표 3-3-7> 정보통신공사업 경쟁제품 지정품목 기술개발 및 인증 현황(2014년 기준)

번호	세부품명	업체수 (품명별 전체)	중소·소상공인			
			업체수	비율	기술개발	기타인증
1	구내방송장치	892	702	78.7%	1	455
2	광다중화장치	78	52	66.7%	-	49
3	다중통신장비	69	44	63.8%	-	34
4	시분할다중화장치	32	21	65.6%	-	26
5	데이터포트장치	48	36	75.0%	1	31
6	디지털서비스유닛	42	32	76.2%	1	20
7	채널서비스유닛	41	31	75.6%	1	30
8	무선통신송신기	196	117	59.7%	-	100
9	무선통신장치	271	165	60.9%	-	137
10	암호송신기	150	81	54.0%	-	67
11	무선송수신기	80	56	70.0%	1	39
12	양방향라디오	53	43	81.1%	-	33
13	열차행선안내장치	84	73	86.9%	1	85
14	원격접속장치	172	120	69.8%	1	137
15	교통정보전광판	558	385	69.0%	1	330
16	기상전광판	78	66	84.6%	-	51

17	안내전광판	607	414	68.2%	1	343
18	동보장치	147	119	81.0%	-	105
19	자동안내장치	63	53	84.1%	-	37
20	구내단자함	86	61	70.9%	1	40
21	국선단자함	85	60	70.6%	1	40
22	본배선반	81	60	74.1%	1	40
23	중간배선반	81	59	72.8%	1	40
24	통합배선반	128	97	75.8%	1	58
25	출입통제시스템	226	194	85.8%	1	142
26	영상감시장치	1,591	1,239	77.9%	1	789
27	보안용카메라	1,541	1,188	77.1%	2	747
28	차량번호판독기	233	196	84.1%	-	167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외 업체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일부)

※ 세부품명-기업규모별 인증 현황은 [첨부 1] 참고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시장특성 및 거시적 환경변화 추세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부합하는 시장경쟁력 보유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구매 제도 하에서 정보통신공사의 공공물량 입찰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의 보유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 특성상 생산시설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국가적 산업 발전 및 기술 경쟁력 보유를 위한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시장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경쟁제품 지정품목 직접생산업체는 설치를 위한 인력확충보

다는 물품 판매,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업 경영성과 제고에 집중하고 시공부문은 비생산업체가 집중함으로써 직접생산업체의 해당 인력보유 부담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업체의 공공물량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생산 및 기술개발 업체의 직접적인 인센티브(입찰 등) 형식이 아닌 해당 기술 적용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해당기술 물품을 취급하는 납품 및 설치공사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업체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취급을 통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분석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 중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품목의 지정적합성 분석을 위하여 지정된 10개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제품군에 대한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분석을 위하여 공사실적, 발주기관별 의존도(발주, 민간 구분), 공사규모 등을 통한 시장집중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공사실적 및 공공기관의 의존도, 공사규모가 클수록 지정품목에 대한 독과점 우려가 크고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석 결과를 통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지정품목 제품군은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공사실적’을 기준에 맞춰 수집·가공하여 적용하였다.

<표 3-4-1> 지정 품목 제품군 및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비교

구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품목 중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제품군	정보통신공사업 분류	
		공사분류	공종분류
1	구내방송장치	구내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
2	다중화장치	전송설비공사	다중화설비
3	무선통신장치	정보망설비공사	무선통신망설비
4	열차행선안내장치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5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설비
6	전광판	정보매체설비공사	전자식전광판설비
7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교환설비공사	집단전화교환설비
		전송설비공사	분배설비
8	출입통제시스템	구내통신설비공사	방법·방재설비
9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10	데이터포트장치	없음	

※ 데이터포트장치는 적합한 공종분류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

분석에서 공사실적 구성비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전체실적을 대비하여 산정하였으며 공공물량의존도는 해당 공종 내 공공물량의 비율을, 평균 공사비율은 금액기준 전체실적을 공사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공사실적은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물량 의존도와 평균공사규모는 열차행선안내장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한 독과점 현황(제한 경쟁)은 전광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제품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8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표 3-4-2> 공공물량 계약 특성별 실적(실적금액 기준)

구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구내방송장치	16.2%	5.5%	3.1%	0.0%
다중화장치	6.2%	21.9%	0.0%	1.2%
무선통신장치	4.3%	7.0%	0.0%	7.2%
열차행선안내장치	35.3%	0.4%	0.0%	64.2%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14.3%	13.9%	2.3%	26.9%
전광판	15.0%	22.3%	0.1%	0.0%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3.0%	0.0%	0.3%	0.0%
출입통제시스템	12.8%	3.3%	0.6%	0.0%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23.3%	10.6%	1.9%	21.8%

※ 산정 비율은 총공사실적 대비 공공물량 부문의 계약특성별 실적 비율임

<표 3-4-3> 제품군별 시장집중도 분석(실적금액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공사실적			공공물량 의존도			평균공사규모 (백만원)	
	실적	구성비	순위	실적	의존도	순위	규모	순위
구내방송장치	2,318	1.79%	2	574	24.8%	6	15.32	8
다중화장치	54	0.04%	8	16	29.4%	5	91.97	2
무선통신장치	296	0.23%	6	55	18.5%	8	31.20	6
열차행선안내장치	13	0.01%	9	13	100.0%	1	98.15	1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1,218	0.94%	3	699	57.4%	3	55.85	4
전광판	538	0.41%	4	201	37.4%	4	67.05	3
전화교환기 네트워크연결장치	95	0.07%	7	3	3.3%	9	43.80	5
출입통제시스템	458	0.35%	5	76	16.6%	7	12.80	9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	8,710	6.72%	1	5,014	57.6%	2	21.73	7

제 5 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피해사례

우리나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사자수도 전체 종사자수의 87%가 중소기업의 종사자²¹⁾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업매출에 있어서는 1%도 안되는 대기업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64%(2658조 6350억원)²²⁾를 차지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수치만으로도 중소기업의 사업성과는 대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지속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 즉,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적합업종제도, 고유업종제도 등은 경쟁제한정책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대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이는 제도적 보호장치로 인한 중소기업 시장으로의 대기업 진입제한은 해당 영역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사회·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내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 현재 추세에서는 실효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시장 진입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대기업 의존도 확대로 더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약자로 해석할 수 있는 중소기업

21) 중소기업청(2012)

22) 통계청(2013)

23) 김은자(1997)

시장의 축소는 국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와 해당 제도 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상이한 정책적 추진 방향에 대한 주장들도 이러한 주장을 위한 문제제기의 이유로써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틀 안에서 스스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각종 투자로부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제도가 특정 기업의 보호장치로 치부되지 않는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환경조성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서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제한 기준인 직접생산업체 기준 적용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중소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시장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시장의 대기업 침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러한 사례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진입은 해당 품목 취급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207개('15년) 물품에 대한 대기업 침해는 위장 중소기업을 통한 공공 조달시장 납품, 위장 중소기업 지배관계에 의한 참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014년 기준 총 30,924개이며 이들을 제외한 19개의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 위장을 통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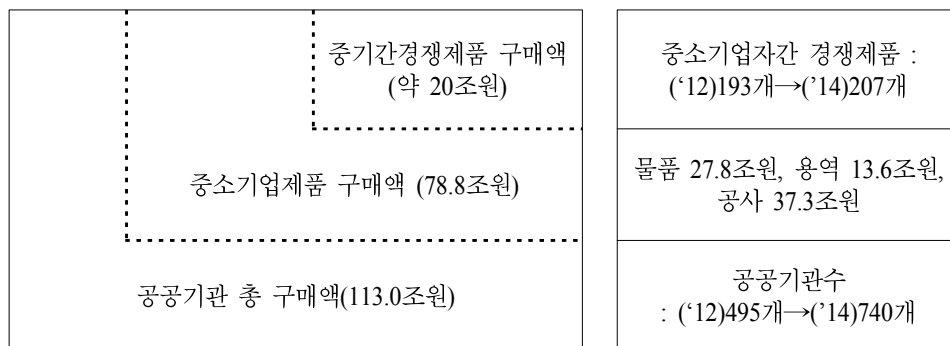
공 조달시장 납품으로 적발되었다. 이들 위장중소기업을 통한 납품규모는 540억원('14년)으로 전년 474억원에 비해 13.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이며 종합하면 총26개의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113.0조원 규모로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78.8조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13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약 20조원)은 입찰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확보 및 공장 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3-5-1] 공공기관 구매액 대비 중기간경쟁제품 구매액 비교('13년)



※ 자료: 중소기업청(2015)

이들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납품 실적은 평균 51억('13년, '14년 평균)이며 세부적으로 10억원~50억원 미만을 납품한 기업이 4개사로 전체의

20%, 50억원~100억원 미만 납품기업은 3개사로 15%, 10억원 미만 납품 기업은 11개사로 55%에 해당한다.

[그림 3-5-2] 연도별 위장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규모



※ 자료: 중소기업청(2015)

또한, 중견·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 유형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분 확보, 중견·대기업의 공장 등의 임대, 대표 및 임원의 겸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8건으로 31%를 차지, 중견·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의 대표 및 등기 임원의 50%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9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기업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견·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가 6건으로 전체의 23%, 기타 중견·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중소기업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2건, 중견·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공장 및 토지, 건물, 시설 등을 임대하여 우회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위장 중소기업의 35%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레미콘, 전기전자부품(정보통신공사업), 기계, 아스콘 등의 순²⁴⁾

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위 위축을 통한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여력 축소에 따른 기술 개발 저하와도 무관하지 않다. 1개 대기업의 중소기업 위장 참여는 해당 공공 조달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다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축소하며 이러한 사례의 지속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악화에 따른 퇴출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목표달성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은 28개 품목, 1,524(‘14년)건의 공공입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입찰건의 총 규모는 649.6억원²⁴⁾(2.1억원 이상 포함 997.5억원)에 해당한다.

적발 중견·대기업 중,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품목에서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장 중소기업은 1개사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입찰 시장 규모 기준으로 보았을 때 1개 위장기업 평균 납품 금액이 51억원임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7.9%에 달하며 이는 단순히 공공입찰의 약 102여건이 대기업에 의해 납품되는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장중소기업의 취급 품목(네트워크 장비 등)은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경쟁제품 지정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장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공사업 침해는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에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진입은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며 이는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저하, 일자리 축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진입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4) 위장 중소기업 26개 중 9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었으며 레미콘 7, 전기전자 4(정보통신공사업 1), 기계 2, 아스콘 2, 일반청소업 및 가구 1개 순으로 업종 분포

25)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에 따라 중견·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2.1억원 미만의 공공물량 총 입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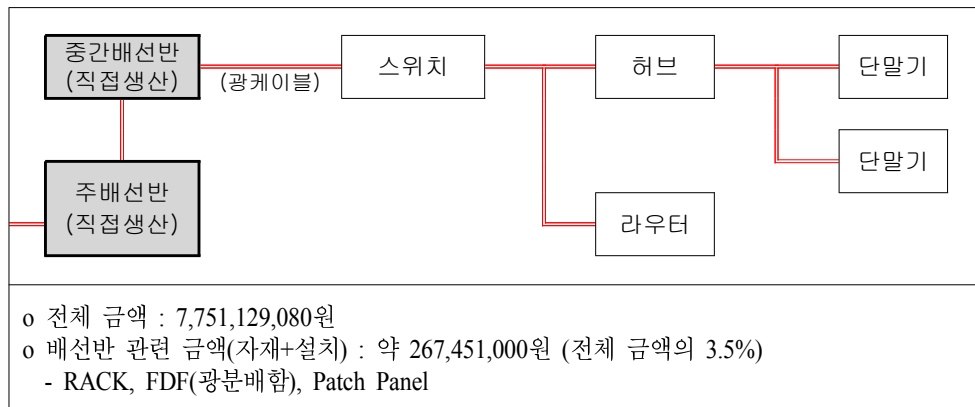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진입 실태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장의 입찰에 대한 실태조사 체계의 마련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경영실적 확대를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에 있어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적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우선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인식 저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 실적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구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포함된 입찰을 경쟁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과 함께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로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품목과 기타 설비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에 포함된 미지정 품목에 대한 공사업체의 입찰 참여도 지정 경쟁제품 직접생산 업체로 한정됨으로써 대다수의 공사업체(중소기업)의 입찰이 제한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그림 3-3-1] 중앙계약관 발주 사례에서 해당 전체 발주금액 중,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품목인 배선반 관련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의 약 3.5%만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통합발주함으로써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입찰 가능 공사업체만이 해당 발주건을 수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으로 포함하여 구매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등 제도가 특정 중소기업만이 활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해석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의 반복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진입 차단을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입찰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중소기업이 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5-3] 중기간 경쟁제품 발주사례 및 지정제품 관련 발주(금액) 비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 4 장 결 론 및 시사점

전세계적으로 경제·사회의 개방화 추세로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도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연관 정책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특정 중소기업의 거대화 및 과점화 등 시장 불일치를 차단하고 공정·자율경쟁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능동적인 시장 환경 마련과 장애요소 제거를 통한 기업 간의 동등 경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관 정책 및 제도를 정립·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이하 제도들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공발주 부문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입찰을 적절히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한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취지와는 달리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품질 및 생산성 저하, 자생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율시장 경쟁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적 역할이 가능한 제도로써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의 공공구매제도 목적을 적극 검토·활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자생과 중소기업 기반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 장벽 해소와 중소기업의 품질, 서비스, 기술개발, 가격경쟁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입찰·납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역시 지정품목에 대한 특정 소수 중소기업에 국한된 보호정책으로 치부됨으로써 대다수 중소기업의 공공물량 참여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효율적인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기준과 국가적 파급효과 분석 등 객관적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ANP 분석결과,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향상, 산업발전 기여 확대, 지정제도의 정량적 판단기준 마련 등의 순으로 향후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적합성 분석을 통해 지정 적합 산업군으로 콘크리트·레미콘 산업군이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73.2점)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산업군이 적합도가 가장 낮은 것(42.0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목별 적합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 결과에서 산업군별 평균 점수는 지정 적합기준 점수(75.0점)에 밑도는 수준으로 도출되어 산업군별로 적합품목 및 부적합 세부품목이 상존하고 있으며 부적합 세부품목이 적합품목의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적합 품목에 대한 지정품목의 지정 철회 및 적합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지정품목 선정은 정량적인 분석·평가를 배제한 절차상 지정 추천과 협의를 통한 제도 내 지정 품목으로의 편입됨에 따라 지정품목 생산 중소기업을 제외한 타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축소로 이

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물량 시장 접근 축소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및 투자 유인 저하 등을 가져오고 있다.

추가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국가·정부차원의 실효성 분석을 위하여 산업군별 경제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제 기여도는 금속, 파급효과는 전자·정보통신, 고용유발효과는 기계 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전자·정보통신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인쇄·광고물과 함께 약 25%에 달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으로 나타났다.

<표 4-1-1>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분석결과 종합(순위)

번호	구분	적합성 분석	국가경제 기여도	파급효과분석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부가가치율)	고용유발효과
1	가구	3(9)	10	5	9
2	금속	2(10)	1	9	2
3	기계	5(7)	2	6	1
4	목재·종이	9(3)	9	7	8
5	섬유	10(2)	5	10	6
6	식품	11(1)	6	3	3
7	인쇄·광고물	8(4)	11	2	11
8	전기	6(6)	4	8	7
9	전자·정보통신	7(5)	7	1	4
10	콘크리트·레미콘	1(11)	8	4	10
11	화학	4(8)	3	11	5

※ 적합성분석의 기타 산업군 순위가 2위로 도출되었으나, 분석결과에서 기타 산업군을 제외하여 분석함에 따라 적합성 분석의 산업군의 순위를 3위부터 해당산업 직전 상위 순위로 조정

※ 적합성분석은 순위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낮음, ()는 적합도가 낮은 산업군을 높은 순으로 조정한 순위

산업별 지정적합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품목의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정품목의 적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연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경제성장기여도 및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국가의 경제 기여도와 부가가치,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연관한 다양한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품 경쟁력 저하 및 기술개발 투자 정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표 4-1-2>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적합성 분석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분석 결과		
구분	총점	순위	구분	총점	순위
가구	33	10	구내방송장치	22	6
금속	22	4	다중화장치	17	4
기계	16	2	무선통신장치	25	7
목재·종이	27	7	열차행선안내장치	19	5
섬유	23	5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13	2
식품	13	1	전광판	12	1
인쇄·광고물	28	9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30	9
전기	25	6	출입통제시스템	28	8
전자·정보통신	17	3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14	3
콘크리트·레미콘	33	10			
화학	27	7			

-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총점은 산업군별 적합성(부적합 산업군을 1순위로 조정) 분석, 국가경제기여도,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총점으로 환산하여 순위 부여
- ※ 정보통신공사업 공종별 분석 결과 총점은 공종별 시장집중도 분석으로 산출된 공사 실적, 공공물량의존도, 평균 공사규모, 제한경쟁 비율의 순위를 합산하여 순위 부여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전자·정보통신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공종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종별로 전광판,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공종이 경쟁제품 지정에 부적합한 공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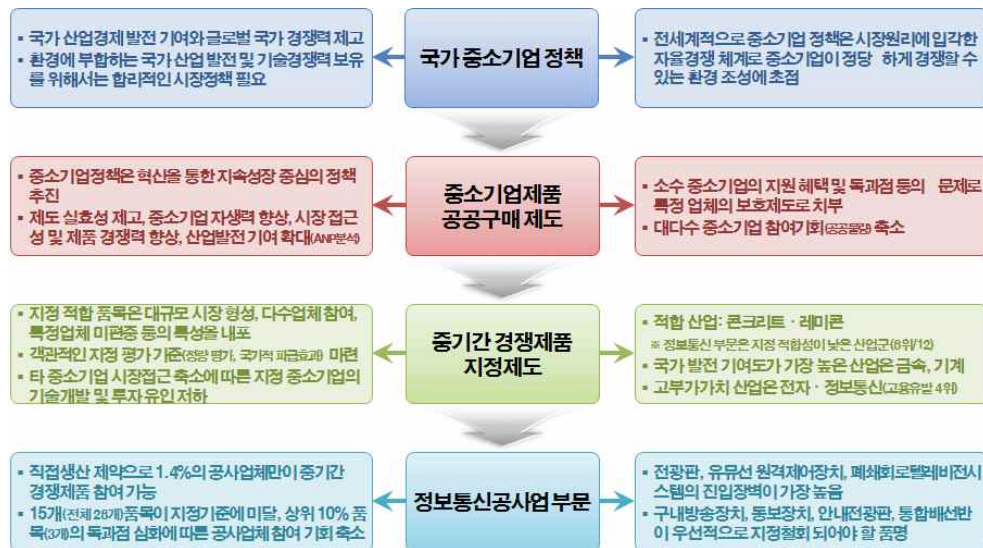
또한 입찰금액 기준 상위 10%(3개)품목의 우선조달제도 적용 수주규모(423.2억원)가 전체 실적의 65.15%²⁶⁾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독과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발전 및 국내 전자·정보통신 부문 경쟁력 제고·활성화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기여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입찰(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전체 1524건)이 활발한 구내 방송장치(44.9%), 동보장치(14.8%), 안내전광판(8.1%), 통합배선반(6.7%)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품 지정을 개선(철회)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 및 공사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총 28개 중, 2014년도 공공기관 구매수요 실적이 10억원 미만인 품목이 15개 품목으로 나타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기준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매수요 실적 10억원 이상인 지정품목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용 입찰건임에도 직접생산업체 참여 조건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업체의 1.39%만이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서는 우선조달제도를 통한 중견·대기업의 참여 차단과 직접생산업체 기준에 따른 입찰 참여 조건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일부 특정업체의 공공물량 수주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6) 2014년도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중기간 경쟁제품의 금액기준 입찰 규모는 99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견·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 우선조달 범위의 총 입찰규모는 649.6억원으로

[그림 4-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선 방향 종합



여러 분석 및 사례에서 비취보았을 때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각종 투자로부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제도가 특정 기업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지 않는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환경조성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서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제한 기준인 직접생산업체 기준 등과 같은 제약조건 등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부터 국가의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대식(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 연구, 지방계약학회.
- 김수정(201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수환(20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제27호.
- 김은자(1997).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7.
- 김희문(2009). “중소기업구매지원정책활성화 방안 연구: 조달청의 구매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 행정대학원.
- 배영식의원실(2009).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책간담회”, 추최 국회의원 배영식.
- 송장준(200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손창록(2013).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선문대 대학원.
- 심용호(2011).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한 그린 ICT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 방안”, 한국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양갑수(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변천”, 성지문화사.
- 양훈화(2005). “미국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와 CCR”, 「e-SME」,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이병기(2015).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이상훈(2012).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청.
- 이창훈(2009).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정제훈(2010). “정보통신설비의 물품구매입찰집행관행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업평가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조달청(2012). “조달통계”.
- 통계청(2014). “e-나라지표: 중기간 제품 구매실적”.
- 중소기업연구원(2006).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혁신”,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중앙회(200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합리화 방안”, 중소기업중앙회.
- _____ (2008), “공공구매제도 주요 개선사항 브리핑”,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청(2006). “공공조달시장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방안 연구”, 조달연구원.
- _____ (2015). “중기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5, 1 28).

[해외 문헌]

- Tomas L. S.(1987),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What it is and how it is used*”, Mathematical Modelling, Mathematical Modelling 9.
- T. L. Saaty(1996),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RWS, Publications.

[별첨 1] 정보통신공사업 경쟁제품 지정품목 기술개발 및 인증 현황(2014년)

제품	업체수	기업구분	업체수	제품특징	업체수
구내방송장치	892	중기업	3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2
				특허	13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3
		소기업	230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2
				GS인증	19
				특허	10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22
				의장(디자인)등록	31
		소상공인	43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3
				GS인증	16
				특허	16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33
				의장(디자인)등록	24
광다중화장치	78	중기업	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1
				특허	5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22	NET인증	-
				NEP인증	-

10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4
				특허	10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2
		소상공인	23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2
				특허	12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3
	다중통신장비	중기업	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1
				특허	2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1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6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3
		소상공인	2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5
				의장(디자인)등록	3
시분할 다중화장치	32	중기업	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4
				GD인증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소기업	9	NET인증	-
				NEP인증	
				전력신기술	
				성능인증	
				GS인증	2
				특허	5
				GD인증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2
		소상공인	6	NET인증	
				NEP인증	
				전력신기술	
				성능인증	
				GS인증	1
				특허	4
				GD인증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2
데이터포트장치	48	중기업	7	NET인증	1
				NEP인증	
				전력신기술	
				성능인증	1
				GS인증	1
				특허	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2
		소기업	13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10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소상공인	1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9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디지털 서비스유닛	42	중기업	7	NET인증	1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1
				특허	-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13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소상공인	12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7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채널서비스유닛	41	중기업	6	NET인증	1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1
				특허	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2
		소기업	12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소상공인	13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8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무선통신송신기	196	중기업	2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2
				특허	3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1
		소기업	5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10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GS인증	5
				특허	26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8
				의장(디자인)등록	10
		소상공인	4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3
				특허	23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8
				의장(디자인)등록	4
무선통신장치	271	중기업	28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3
				특허	6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1
		소기업	6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8
				특허	32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9
				의장(디자인)등록	11
		소상공인	7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5
				특허	34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0
				의장(디자인)등록	8

암호송신기	150	중기업	13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2
				특허	2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1
		소기업	3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3
				특허	19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6
				의장(디자인)등록	8
		소상공인	32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2
				특허	13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2
무선송수신기	80	중기업	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
				특허	1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2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2
				특허	9

10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4
		소상공인	29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1
				성능인증	-
				GS인증	-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5
				의장(디자인)등록	3
양방향라디오	53	중기업	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
				특허	1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2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3
				특허	9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4
		소상공인	1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
				특허	4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2
열차행선 안내장치	84	중기업	9	NET인증	1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1
				특허	5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1
		소기업	19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15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4
		소상공인	45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7
				특허	28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5
				의장(디자인)등록	6
원격접속장치	172	중기업	14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1
				성능인증	-
				GS인증	2
				특허	4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4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7
				GS인증	10
				특허	31
				GD인증	1

1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실용신안등록	9
				의장(디자인)등록	9
		소상공인	59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4
				GS인증	6
				특허	36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2
				의장(디자인)등록	5
교통정보전광판	558	중기업	24	NET인증	1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2
				특허	12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5
				의장(디자인)등록	4
		소기업	113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4
				GS인증	8
				특허	65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22
				의장(디자인)등록	30
		소상공인	248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11
				특허	107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20
				의장(디자인)등록	32
기상전광판	78	중기업	5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4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2
		소기업	16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8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소상공인	45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3
				특허	2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3
안내전광판	607	중기업	25	NET인증	1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2
				특허	12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5
				의장(디자인)등록	4
		소기업	12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4
				GS인증	8
				특허	67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23

1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소상공인	268	의장(디자인)등록	3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11
				특허	112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21
				의장(디자인)등록	37
동보장치	147	중기업	1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3
				특허	5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3
		소기업	5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6
				특허	3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5
		소상공인	58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6
				특허	27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7
				의장(디자인)등록	2
자동안내장치	63	중기업	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

				특허	2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1
				의장(디자인)등록	1
		소기업	25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2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2
		소상공인	2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2
				특허	9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1
구내단자함	86	중기업	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1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23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3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4
		소상공인	31	NET인증	-

1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13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1
국선단자합	85	중기업	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1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23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3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4
		소상공인	3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13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1
본배선반	81	중기업	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1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23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3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4
		소상공인	3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13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1
중간배선반	81	중기업	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1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23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3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4
		소상공인	29	NET인증	-
				NEP인증	-

11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1
				특허	13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2
				의장(디자인)등록	1
통합배선반	128	중기업	12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
				특허	1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
				의장(디자인)등록	-
		소기업	35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3
				특허	14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6
		소상공인	5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1
				특허	19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
				의장(디자인)등록	2
출입통제시스템	226	중기업	19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6
				특허	14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4

		소기업	74	의장(디자인)등록	2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2
				GS인증	11
				특허	35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6
				의장(디자인)등록	7
		소상공인	101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
				GS인증	3
				특허	42
				GD인증	1
				실용신안등록	3
				의장(디자인)등록	3
영상감시장치	1,591	중기업	115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3
				GS인증	13
				특허	53
				GD인증	6
				실용신안등록	19
				의장(디자인)등록	16
		소기업	416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6
				GS인증	39
				특허	168
				GD인증	7
				실용신안등록	40
				의장(디자인)등록	43
		소상공인	708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6

1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GS인증	31
				특허	247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5
보안용카메라	1,541	중기업	115	의장(디자인)등록	37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1
				성능인증	3
				GS인증	13
				특허	53
				GD인증	8
				실용신안등록	20
				의장(디자인)등록	15
		소기업	394	NET인증	-
				NEP인증	1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4
				GS인증	32
				특허	160
				GD인증	5
				실용신안등록	41
				의장(디자인)등록	38
		소상공인	679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5
				GS인증	29
				특허	235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43
				의장(디자인)등록	33
차량번호판독기	233	중기업	18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4
				특허	10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5
				의장(디자인)등록	4

		소기업	70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3
				GS인증	13
				특허	39
				GD인증	2
				실용신안등록	6
				의장(디자인)등록	11
		소상공인	108	NET인증	-
				NEP인증	-
				전력신기술	-
				성능인증	1
				GS인증	7
				특허	49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5
				의장(디자인)등록	7

▣ 저 자 ▣

□ 연 구 책 임 : 박 상 수 선임연구원

□ 연 구 참 여 : 김 현 진 연 구 원

이 종 희 연 구 원

15- 산업-0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2015년 7월 일 인쇄

2015년 7월 일 발행

발행인 문 창 수

편집인 임 주 환

발행처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12번길 80

TEL: 031-231-3400 FAX: 031-269-5210

인 쇄 인성문화(02-2275-9308)
